

연구총서 2001-21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여 인 곤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계승한 러시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다. 1991년 말부터 1999년 말까지 엘친 대통령은 안보·군사면에서 러시아군을 새로이 창설하는 한편, 군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 및 주변 정세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군사독트린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면서 2000년 3월 대선 승리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내적으로 정치안정을 이룩하고 있다. 안보·군사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신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과 정책의 변화는 세계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러시아 안보·군사전략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1. 엘친 집권초기의 안보·군사전략과 정책

가. 고르바췌프의 군사전략 지속과 러시아군 창설

엘친 대통령은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고 신생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서 약 1년간 친서방 외교를 적극 수행하였다. 그는 친서방 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군사전략 면에서는 고르바췌프 시대의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의 군사독트린을 1992년 5월 「군사독트린 초안」이 마련될 때까지 견지하였다.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개념은 방어에 충분한 정도까지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국내경제 회복과 발전이라는 고르바췌프 시대와 같

은 목표를 달성해야 했기 때문에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바탕으로 안보·군사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러시아는 감축이후 자국과 미국에 남게 될 나머지 전략공격무기가 상대국을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에 찬성하였다.

발트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국 간에 CIS가 형성된 직후 CIS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협정들이 CIS 11개국에 의해 서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CIS의 다른 구성국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군을 형성하고자 하여 연합된 일반목적군이라는 개념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과 국방부를 창설하는 대통령령을 1992년 5월 7일 발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군사독트린을 유지하고 있던 러시아 정부는 냉전종식 직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미국과의 이해 충돌, NATO의 군비와 동구 확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국익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군이 창설되었던 1992년 5월 군사독트린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은 1993년 11월 채택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기초가 되었다.

나. 옐친 집권초기의 군사정책

1991년 말 러시아 출범 초기부터 1993년 11월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이 채택될 때까지 러시아의 대내 군사정책과 관련, 옐친 대통령과 구소련 시대 의회인 인민대표대회 및 최고회의의 대의원들 간의 개혁노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라초프 국방장관과 보안기관 장들은 자신들 휘하 병력의 중립을 주장하였다. 군의 지위가 열악

해 사기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이 지역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이었다.

러시아의 대외 군사정책과 관련, 엘친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 1992년 2월 2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가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표명하였다. START I 조약을 미국 상원이 10월 1일 비준한 데 이어 러시아 최고회의도 11월 4일 비준하였고, 미·러 양국의 협상 결과 1993년 1월 3일 START II 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대러 경제지원 확대 가능성과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향후 미·러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980년대 말에 중소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이익을 도모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련 붕괴 이후 동북아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다. 1992년 1월 31일 개최된 일·러간 뉴욕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의 실무자 회의 등에서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이점이 노정되었다.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서방국가들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한편,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러시아는 한국과 군사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을 받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새롭게 해석하였고 무기공급을 중단하였다.

2. 엘친의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1993)과 정책

가. 군사독트린 채택 배경과 특징

엘친 대통령은 소련 붕괴이후 약 1년간 전술한 바와 같이 친서방 외교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NATO는 1991년 채택된 ‘신전략개념’을 바탕으로 동구국가 및 CIS국가들과의 외교적, 군사적 접촉을 제도화하였다. 1992년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슬라브족인 세르비아계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1992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부시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민주당 정부로 변화되는 시점에 안보이해를 중시하고 구소련 공화국과 동구에 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덜 서방적이고 동방과 남방에 정향된 유라시아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2년 5월 마련된 군사독트린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엘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와 소련 시대 의회인 최고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승인되지 않고 있었다. 엘친 대통령은 보·혁간 대립이 첨예화되자 1993년 9월 21일 초헌법적 조치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민주헌법을 채택하기 위한 국민투표와 다당제 총선을 12월 12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엘친 대통령은 보·혁 대결과정에서 노정된 군의 분열상을 타파하고 군 개혁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2000년경까지만 적용하기 위한 과도기적 문서로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기본규정」을 11월 2일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하게 되었다.

엘친 대통령의 이 군사독트린은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독트린과 비교할 때 그 자체가 방어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군사독트린은 안보 위협을 상징하는 근거와 접근방식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실체와 규모 면에서, 선제 핵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나. 대내외 군사정책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이 채택된 1993년 11월부터 엘친 대통령이 전격 사임한 1999년 12월 말까지 러시아의 대내 군사정책과 관련, 중요한 점은 군 개혁과 체첸 전쟁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병력감축, 군구와 군사력 명령구조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군개혁의 제1단계가 1998년 말까지 완료되었다. 2001년까지의 다음 단계는 작전 준비태세와 장비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둘째, 1991년 말 체첸의 독립을 선언한 두다예프 대통령의 도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군이 파견되어 1994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 제1차 체첸 전쟁이 수행되었다. 체첸 반군들이 이웃 다게스탄 마을들을 점령함에 따라서 1999년 8월 체첸에 대한 러시아군의 제2차 공격이 감행되었다. 신임 총리로 임명된 푸틴이 강경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대외정책과 관련,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을 채택한 엘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발표된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응하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4월 25일 구축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96년 여름 대통령에 재선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유라시아외교를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전방위외교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와 NATO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1999년부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과 코소보 사태 및 러시아의 대이란 핵·미사일 기술수출 문제 등으로 러시아와 미국 간에 갈등면이 부각되었다.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열린 대통령의 전방위외교에 따라서 대미관계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에 의해 다시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는 대중 정책과 관련, 정상 및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러시아의 대중 무기판매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고,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확립 이후 군사기술 협력관계가 심화되었다. 이는 중·러 양국이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일본과 고위인사 교환방문, 군인사 교류 등을 통해 안보·군사협력을 증진하였다. 러시아는 1993년 군사독트린에서 '적대국가 부재'를 선언하였고, 일본도 「1994년 방위백서」에서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북방 영토 문제와 일본의 TMD 구축문제는 일·러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외교노선으로의 전환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투자, 1993년 8월 한국의 경협차관 제공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1994년 후반이후 한반도정책을 균형된 남북한정책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1999년 말까지 안보·군사면에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안정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푸틴의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2000)과 정책

가. 신군사독트린 채택 배경과 특징

푸틴 대통령은 엘친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추진하였던 전방위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1993년의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이 2000년경까지를 상징한 과도기적 독트린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1999년 봄부터 여름 사이 코소보 사태와 관련하여 NATO가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이도 군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신개념을 채택한 바 있었다. 또한 체첸과 중앙아시아 이슬람인들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의 군사독트린, 특히 핵독트린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2000년 4월 21일 신군사독트린을 마련하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의 신군사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향후 10년간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과도기 군사독트린이라는 점이다. 둘째, 엘친 대통령의 군사독트린이 채택된 이후 많이 변화된 러시아의 지정학적, 군사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대의 군사·정치적 상황의 전개 상태 및 전망과 관련, 단극체제와 다극체제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경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증대를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기존의 규정들을 수정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국방부군이 외부침략을 격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와 불법적 무장폭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나. 대내외 군사정책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 개혁을 시도하려는 푸틴대통령의 능력은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소모시키면서 계속되는 체첸 전쟁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경제의 구조조정 같은 주요한 대내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도전을 받았다. 군 개혁은 경제적 재원과 급속한 현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에 계속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로 국방비가 증가하였다.

대외 군사정책과 관련, 2000년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해 실용주의적 전방위외교를 수행하면서 미국과 우호관계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조약) 개정과 NMD 체제 구축 문제, 체첸 사태 등으로 미·러간 갈등이 노정되었다. 2001년 러시아의 대미관계에서는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이전까지 협조면보다는 갈등면이 부각되었다.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러간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으나, 미국의 MD계획 강행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 무기판매는 증가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2000년 중국과 정례 정상회담 개최, 고위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미국의 NMD, TMD 구축 계획과 국제안보질서 주도에 반대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지향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1년 러시아는 중국과 3차 정상회담과 다수의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세계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서 굳건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향후 20년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7월 16일 체결되었다. 중·러

양국은 미국의 MD 체제 구축과 ABM 조약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전쟁을 지지하였다. 한편 2000년 일·러 양국은 정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모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대일 안보·군사 협력의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1년에는 러·일 관계가 매우 호전되어 러시아측은 대일관계가 수년내 최고로 훌륭한 상태라고 평가하였고, 일본도 양국관계 수위가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만족을 표명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정치 안정과 경제회복 추세로 일본이 25년만에 처음으로 250명의 대규모 경제인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정책과 관련,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 10주년을 맞는 2000년 정상회담, 총리회담, 외무·국방장관 회담 등을 개최하고 기존의 상호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하였다. 특히 안보면에서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방산·군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1년 푸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심화하였다. 한·러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에 관해 집중 협의하였고, 러시아는 군사무기 판매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러시아의 대북 관계는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 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의 방중, 남북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등을 통해 중·러·북한 3각 안보협력이 긴밀히 되었다. 2001년 러시아는 북한과 2000년 체결된 신조약과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채택된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을 확대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를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었다. 양국은 ABM 조약 유지와 미국의 MD 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 공동의 입장을 취하였다.

4. 푸틴의 군사정책 전망: 지속성과 변화

가.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의 지속과 변화면

러시아가 출범한 1991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의 지속면과 변화면을 고찰할 때,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론상 군사독트린의 방어적 성격, 핵무기 감축과 핵 억지력 유지, 병력 감축, 무기판매의 확대 노력,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 유지, 대중 안보 협력 강화, 북방영토와 대일 평화조약 문제의 미해결,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정책 등이다. 반면 러시아의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핵무기 사용(선제 핵공격 대상의 확대), 대미 관계(이념적 동반자로부터 잠재 적국의 시사, 9·11 테러사건 이후 협력관계), 대일 군사협력(협력의 확대), 북한 미사일(발사시험 우려로부터 평화적 목적 주장)과 대북 군사협력(군사무기 부품 판매로부터 무기 판매)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나. 푸틴의 군사정책 전망

대내 군사정책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이론상 방어적인 군사독트린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세적인 2000년 신군사독트린을 2005년경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무기를 계속 감축하되 핵억지력 및 러시아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시 선제 핵공격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자 할 것이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개혁 정책에 따라서 2005년경에는 러시아군 병력이 60~70만 명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군 개혁의 다음 단계는 '상비부대' 수를 증가시키고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와 성능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체첸 사태의 장기화는 푸틴 대통령에 적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군사정책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국제 안보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및 미국과 평등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인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등 범세계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수출 확대는 이란을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러 경제지원 등이 러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러시아는 미국의 MD 체제 계획에 다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중국과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지역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접경지역에서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의 방지,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 유지, 일본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창설 등의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정책의 기조가 되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4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 등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속 주장할 것이다. 러시

이는 한국 정부에 미국의 MD 계획에 대한 비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직접적인 대북 압력이나 서방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이 과거 핵 규명을 위해 북한에게 강제사찰을 하거나 군사제재를 가하는 데는 반대할 것이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 특히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미국의 MD 계획 추진을 일정한 수준에서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MD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의 대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러시아는 2003년까지 동결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2003년 이후에는 묵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대북 무기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는 한반도 군사균형을 고려하여 첨단 군사무기와 장비를 대량으로 북한에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5.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미국의 ABM 조약 탈퇴 결정으로 미국과 러·중이 미국의 MD 체제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MD 계획 문제가 협상과 대화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정부와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으며 한·미간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understanding)는 찬성을 뜻하는 외교용어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MD 체제를 구축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북한과의 미사일 개발기술 협력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그와 같은 대북정책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푸틴 대통령은 2001년 2월 23일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하면서도, 러시아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엄격한 수출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자나 부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러시아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책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간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해 남북한과 미·러 4국의 관료와 학자들이 유럽 재래식전력 감축(CFE) 협상 경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러시아는 군사무기와 장비 판매의 확대를 위해 남북한 이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의 무기체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18억 달러 경험차관 미상환액의 상계차원에서 러시아 방산물자를 적정 수준 구매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II. 엘친 집권초기의 안보·군사전략과 정책	3
1. 친서방노선과 고르바초프의 군사독트린 지속	3
가. 냉전종식과 친서방노선	3
나. 고르바초프의 군사독트린 지속	5
2. 러시아군 창설과 군사독트린 초안 마련	8
가. 러시아군 창설과정	8
나. 러시아군 조직과 군사력	12
다. 군사독트린 초안 마련	15
3. 군사정책	17
가. 대내 군사정책	17
나. 대외 군사정책	19
III. 엘친의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1993)과 정책	29
1. 군사독트린 채택 배경	29
2. 군사독트린의 내용과 특징	32
3. 군사정책	39
가. 대내 군사정책	39
나. 대외 군사정책	42
IV. 푸틴의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2000)과 정책	63
1. 신군사독트린 채택 배경	63
2. 신군사독트린의 내용과 특징	67

3. 군사정책	73
가. 대내 군사정책	73
나. 대외 군사정책	78
V. 푸틴의 군사정책 전망: 지속성과 변화	109
1.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의 지속과 변화면	109
가. 지속면	109
나. 변화면	114
2. 푸틴의 군사정책 전망	117
가. 대내 군사정책	117
나. 대외 군사정책	118
VI. 정책적 고려사항	123
<부록> 소련군과 러시아군의 군비 비교	125
참고문헌	129

I. 서론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계승한 러시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다. 1991년 말부터 1999년 말까지 엘친 대통령의 통치 8년 동안 러시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대내적으로 엘친 대통령은 구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강력한 대통령제 헌법을 채택하며 양원제 민주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러시아에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였다. 경제난 속에서 1998년 8월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등 체제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노정되었고 시장경제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친 대통령은 구소련 시대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 엘친 대통령은 소련 붕괴로 국력이 현저히 약화된 가운데서도 탈냉전의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안보·군사면에서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새로이 창설하는 한편, 군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 및 주변 정세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군사독트린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1999년 12월말 엘친 대통령의 전격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조기에 수행하게 된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면서 2000년 3월 대선 승리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내적으로 전례 없는 정치안정을 이룩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제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특히 안보·군사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 신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과 정책의 변화는 세계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러시아 안보·군사전략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제Ⅱ장은 옐친 집권초기의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옐친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구체적인 안보·군사정책은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구분하였고, 대외정책은 세계적 차원과 동북아 차원 및 한반도 차원으로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제Ⅲ장은 1993년 11월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을 채택한 배경,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고, 군사독트린을 기초로 추진된 구체적인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제Ⅳ장은 2000년 4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을 채택한 배경 및 그 내용과 특징, 신군사독트린을 기초로 수행된 중요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분석과 고찰들로부터 제Ⅴ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 안보·군사전략 및 정책의 지속면과 변화면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푸틴 대통령의 향후 군사정책을 대내적 차원, 세계 및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마지막 제Ⅵ장은 우리 정부가 대러 및 대북 안보·군사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II. 엘친 집권초기의 안보·군사전략과 정책

1. 친서방노선과 고르바초프의 군사독트린 지속

가. 냉전종식과 친서방노선

엘친 대통령은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고 신생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서 약 1년간 친서방외교를 적극 수행하였다.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종식 직후 러시아는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첫째, 양극체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대체되어 왔으며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군사비를 삭감하고 경제복지와 경쟁력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이 주요한 정치적, 이념적 동맹국이고 경제지원의 주요한 원천이며 러시아의 발전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과 동반자관계뿐만 아니라 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있는데 특히 1992년 2월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러간 동반자관계가 구축되었다. 셋째,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위협세력도 없다. 넷째, 그러나 핵무기 때문에 인류가 절대적 평화조건 하에 아직 있지 않으며 유고에서와 같은 민족분쟁은 위협하다.¹⁾

이와 같은 국제정세 인식 하에 러시아 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혁을 위한 가장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 두었다. 그리고 코지레프 당시 외무장관이 밝힌 러시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① 강국으로서 선진 서방민주사회로의 가입, ② CIS 국가, 인도, 중국, CIS 남부 이웃국가

1) "Yeltsin Delivers State of Republic Address," FBIS-SOV-91-250, pp. 27~30; "Moscow Program Observes Changing World Order," FBIS-SOV-92-008, pp. 5~6 등 참조.

등 접경국가들과 선린관계 형성, ③ 선진국들과 경제관계 발전, 국내 경제를 위한 투자 및 지원 유도, ④ CIS 국가에서 러시아 주민들의 인권 보장 등이었다.²⁾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서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화해 노선을 추구하고 군비통제, 전략핵무기의 축소와 제거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NATO를 더 이상 러시아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과 정상관계를 확립하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하나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³⁾ 특히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동맹국인 북한과 고도의 군사협력을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순진한 것”⁴⁾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한국 중심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시기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중심은 미국과 유럽 서방국가들에 있었다.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개혁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MF, IBRD, GATT에 가입하고 G7, EC, OECD, 아·태 및 기타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정부는 상기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전술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에 기초된 친서방 외교를 1992년 말까지 수행하였다.

2) “Kozyrev Outlines Foreign Policy Priorities,” FBIS-SOV-92-169, p. 25.

3) Andrei Kozyrev, “Russia: A Chance for Survival,”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p. 1~16.

4) *Izvestiya*, April 1, 1992, p. 6.

나. 고르바초프의 군사독트린 지속

엘친 대통령은 상기와 같이 친서방 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군사전략 면에서는 고르바초프 시대의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의 군사독트린을 1992년 5월 『군사독트린 초안』이 마련될 때까지 견지하였다. 국방에서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고르바초프의 개념은 핵무기의 군사적 유용성 약화와 최신 재래식무기들의 전투능력 고조를 배경으로 정립될 수 있었다. 구소련의 정치, 군사지도자들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미국과 핵균형이 이루어지자 핵전쟁이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무기의 주요 역할은 억제력으로 간주되었고, 구소련의 군사전략도 핵전쟁으로부터 재래식 전쟁을 위한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최신 재래식 무기들이 핵무기를 대신하여 대량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신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수립하여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개념은 방어에 충분한 정도까지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는 핵차원에서는 최대 수준의 전략균형이 아니라 최소 수준의 전략균형에 의해 보장되는 공동안보와 상호신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재래식 차원에서는 공격보다는 방어가 중시되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방어에서 전략적 차원에서의 방어로 전환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것이 아니라 침략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충분하게 군사력이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고르바초프는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동서간 긴장완화를 통

5) Mary C. Fitz Gerald, “Gorbachev’s Concept of Reasonable Su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in George E. Hudson (e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pp.

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침체된 소련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보개념을 국가안보로부터 공동안보로 전환시키고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정립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러시아도 국내경제 회복과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바탕으로 안보·군사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서 1992년 1월 29일 미국 국민들 앞에서 핵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미·러 관계의 안정을 강화하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몇 시간 후 옐친 대통령도 러시아 TV, 라디오를 통해 “군비의 제한과 삭감에 대한 러시아 정책”⁶⁾이라는 제목 하의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군비제한과 삭감을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문제로 간주하고 전략핵, 전술핵의 일방적 삭감조치를 포함한 대폭적인 핵군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 구소련군 병력 축소, 국방예산 삭감 등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핵무기와 관련, 옐친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1991년 7월 31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의 신속한 비준과 발효⁷⁾를 희망하였다. 전략무기 감축을 목표로 지상과 해양에 배치된 전략탄도미사일 약 600기와 핵탄두 약 1,250개의 경계체제 해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ICBM) 용의 사일로 130기의 해제, 원자력잠수함 6척 미사일 발사장치의 해제, 전략공격무기의 개발이나 현대화 계획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TV-95MS 중폭격기 및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의 생산 중지,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175~195.

6) 보리스 옐친, “군비제한과 삭감에 관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하여,” 『중소연구』, 통권 53호 (1992 봄), pp. 309~314.

7) START I은 1992년 10월 1일 미 상원, 11월 4일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각각 비준되었고 1994년 12월 5일 발효되었다.

의 축소 등도 발표하였다. 또한 감축 이후 러시아와 미국에 남게 될 나머지 전략공격무기가 상대국을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에 찬성하였다. 전술핵무기의 감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미국과 병행하여 취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상발사 전술미사일의 핵탄두 생산 중지, 해상발사 전술핵무기의 1/3 폐기, 공군의 전술핵탄두 저장분 1/2 감축 계획 등도 발표하였다. 모든 핵무기 실험금지를 지지하고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산업용 원자로를 2000년까지 가동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요격미사일의 방위 및 우주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조약)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에 대신할 전세계적 규모의 방위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금지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무를 확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였다.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 러시아는 소련군 70만 명을 감축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협력하여 국경지역의 병력 및 군비삭감에 관한 교섭을 중국과 하기로 하였다. 국방예산과 관련, 러시아는 계속해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그것을 민수용 목적사업으로 전용할 것이고,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방위비가 이미 20% 삭감되었고 1992년에 또 다시 10%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군수산업을 민수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국제협력, 특히 합작사업을 환영하고 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을 지지하였다. 상기와 같은 군축조치는 러시아가 자국의 방위력을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충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수행함으로써 상당량의 재원절약이 가능하고 절약

된 재원을 비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데 충당하고자 하였다.

2. 러시아군 창설과 군사독트린 초안 마련

가. 러시아군 창설과정

1991년 말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소련군은 약 340만 명의 병력과 5개 군종(전략핵군, 지상군, 해군, 공군, 방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트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국 간에 CIS가 형성된 직후 구소련군이 다음과 같은 3개 군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① CIS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군(모든 핵군, ABM과 방공군, 공정대, 국경사령부와 해군), ② 지상군과 공군으로 구성되고 CIS의 각 구성국들에 의해 지휘되나 합동군의 성격을 가진 일반목적군(general-purpose forces), ③ CIS 구성국들의 준군사군(국경수비대). 이에 따라서 구소련의 국방장관이었고 공군 원수인 사포쉬니코프가 1991년 말에 CIS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92년 3월에는 CIS 일반목적군을 위한 사령관도 임명되었다. 이후 개최된 CIS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유지군, 일반목적군의 지위, 병참의 유지, 국경수비대의 충원과 합동지휘 등에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모든 협정들이 CIS 11개 국에 의해 서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CIS의 다른 구성국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군을 형성하고자 하여 연합된 일반목적군이라는 개념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과 국방부를 창설하는 대통령령을 1992년 5월 7일 발하였다.⁸⁾ 이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연방군 구성에는 러시아연방 영토에 배치되어 있는 구소련군의 군관리기관, 대규모 군단, 병단, 군부대, 시설, 조직, 군사학교 및 러시아의 관할하에 있으면서 국외에 배치된 군집단과 함대가 포함된다.

- 이전에 채택된 협정에 따라, 현행 전략군 관리시스템을 유지하며 러시아연방 영토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군은 CIS 합동군 구성에 포함된다.

- 러시아연방군의 지휘는 최고사령관인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수행하며 직접적인 관리는 러시아연방 제1국방차관에게 위임된다.

- 러시아연방 국방부는 육군 및 해군의 군사개혁 내용에 대하여, 러시아연방군의 군인 및 전투원의 감축에 대하여, 직업군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고려한 유지비 삭감에 대하여, 무기 및 장비의 개발과 구입시스템의 재조직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한다.⁹⁾

1993년 2월 24~25일 도쿄에서 개최된 러·일 방위연구회 회의에서 러시아 제1참모차장 A. I. 니콜라예프 중장과 참모본부 대학교수인 G. D. 이바노프 소장은 “러시아 방위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러시아군 정비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¹⁰⁾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정책 목표, 러시아군의 임무, 러시아군의 정비계획 등이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익을 첫째, 러시아가 국제사회 내에서 강대국에 어울리는 지위를 점하는 것, 둘째,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러시아는 군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국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 군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분쟁의 방지, 안전

8)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89.

9) “러시아 聯邦軍 창설에 관한 러시아 大統領令”, 『현대 러시아연구』 (1992. 7), pp. 95~96.

10) “『新生러시아軍』 構築의 目的,” 『국제문제』, 제24권 제6호, 통권 274호 (1993. 6), pp. 80~83.

보장 확보, 러시아에 중요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창출 등이다. 또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첫째, 전략핵전력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효과를 발휘하고 확실하게 보복행동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세계적인 핵전쟁이나 통상전쟁을 억지하는 것, 둘째, 일반임무전력을 침략과 군사행동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적시에 증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구축하고 전투력을 유지해서 지역분쟁이나 무력충돌을 억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설 당시 러시아군의 기본방침은 억지를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러시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① 안전보장의 확보, 러시아의 영토보전, 주권과 국익의 옹호, ②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전쟁과 무력분쟁의 방지, ③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방지를 위한 활동에의 참가, ④ 러시아 혹은 동맹국에 대한 침략이 개시됐을 경우, 침략을 격퇴하고 적을 격멸하는 것, ⑤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관한 러시아의 의무 수행, ⑥ 기타 산업·환경파괴 사고나 자연재해에 있어서의 구원활동에 대한 참가 등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군을 질적으로 새로운 군으로 만들기 위해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배경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세계의 지정학적·전략적 상황의 근본적 변화이었다. 이것은 냉전의 종식, 구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단일의 군사·전략 공간의 붕괴, 민족적인 독자군을 가진 신생 주권국가군의 탄생 등을 가리킨다. 둘째, 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용이치 않은 러시아 국내의 상황이었다. 셋째, 러시아군이 새로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구소련으로부터 계승한 군대는 현상 그대로는 러시아군에 주어진 임무나 당시의 상황에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러시아 정부는 군을 정비하는 기본적 방향을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모든 군종의 질적 개편, 부대의 편성·정수의 개선, ② 새로운 임무 및 군의 정비조건에 따른 전투즉

응(卽應)태세 시스템, 작전·전투훈련의 개선, ③ 부대 수의 대폭적 삭감, 육해군의 정원과 정수의 일치, ④ 전투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부대운용 시스템의 창설과 개선, ⑤ 징병제와 지원제의 혼합병제로의 이행, ⑥ 기타 인사, 장비, 교육·훈련의 쇄신, 군인의 법적 옹호 등이다.

러시아 정부는 상기와 같은 기본적 방향에서 군사력 정비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제1단계(1992년): 보유장비의 점검·심사, 새로운 부대의 편성 개시, 부대의 축소, 혼합병제로의 이행 개시 등.

제2단계(1993~95년): 5 군종제(전략로켓트군, 지상군, 방공군, 공군, 해군)의 유지, 병력의 대폭적인 축소에 대응하는 기동군 창설, 외국주둔 부대의 철수 완료, 혼합병제의 이행과 부대 축소의 계속적 실행, 부대의 군·사단 편성을 군단·여단 편성으로 이행, 1996년 이후의 개편을 목표로 한 종합적 연구.

제3단계(1996~2000년): 질적으로 새로운 러시아군의 완료, 러시아 군·군종·병과의 구성을 대폭 개선, 부대배치와 군사인프라 구축의 기본적 완료, 혼합병제로의 이행(지원제를 50%로 함) 완료.

이와 같이 정비되는 러시아군의 방위구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분쟁에는 기본적으로 방호부대가 상대하고, 다음으로 기동군이 특정지역의 방호부대를 증강하는 형태로 국지전쟁이나 무력분쟁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최고총사령부의 지원군을 동원·편성해서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계획된 제조치가 실현되면 러시아는 수적으로 크지 않지만(『국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150만 명 이하), 방위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고 인접 국가들에 군사적 위협을 주지 않는 군을 갖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나. 러시아군 조직과 군사력

러시아에서는 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명백히 확립되어 있다. 러시아연방 헌법 제87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군의 최고사령관이다.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고, 군사력의 직접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에 귀속된다. 총참모부(the General Staff)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군에 대한 행정권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에 있다.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정부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러시아의 군사조직은 미국의 군사조직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서방과 같이 민간인의 권위에 군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군사지휘권의 역사적 전통은 러시아에서 상당히 다르다. 짜르는 장교로서 교육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군복을 입었으며 군계급을 갖고 있었다. 구소련 시대에 스탈린은 항상 군복을 입고 원수 칭호를 받았으며,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도 육군 원수의 직을 가졌다. 짜르와 구소련 시대의 전통에 의해 국방부장관은 통상적으로 현역군인이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군에 대한 민간 통제를 확립한다는 군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 최초로 민간인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국가두마에도 현역 장교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군사적 사안들이 러시아 정부의 최고위 수준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군사력에 대한 명목상의 사령관으로서 일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3인의 제1차관과 6인의 차관 및 1인의 군감찰감에 의해 구성되는 협의회(collegium)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은 또한 국방부의 중요한 참

11) lcweb2.loc.gov/cgi-bin/query/r?frd/csydy:@field(DOCID+ru0194), p. 1.

모회의 및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러시아 국방부의 집행기관은 총참모부이고 총참모장에 의해 지휘된다. 고위장교들이 민간지위도 갖게 하는 구소련의 관습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총참모장은 또한 국방부 제1차관이다. 러시아의 총참모부 장교들은 자신의 권한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다. 총참모부는 15개의 주요한 지휘부서와 미확정 수의 작전부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모는 기능에 따라서 구성되는데 기능 분야를 감독하는 지휘부서와 작전부서를 각각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서 명칭에 의해 그 기능을 알 수 있다.

총참모부 부서들 중 가장 비밀스런 것은 정보본부(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또는 GRU)인데, 이는 1920년대 설립이후 러시아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엄밀히 보호되는 부서이다. 정보본부는 총참모부와 정치지도자들에게 가상 적들의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한다. 이 기관은 5개의 작전부로 구성되고, 각 부는 지정된 지역을 담당한다. 첫 4부는 유럽, 아시아, 서반구와 영국, 중동과 아프리카를 각각 담당한다. 제5부는 구소련 시대에 군사정보 활동을 조정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구소련 공화국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보본부의 소재지는 모스크바이고, 여기에는 지역과 기술 전문가 및 해외 지역사무소 직원을 포함하여 약 2,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 각각의 군구(military district)와 함대들도 자신의 정보부서를 갖고 있다.¹²⁾

구소련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및 군비를 비교하면 <표-1> 및 <부록>과 같다. 비교연도는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 러시아군이 창설된 1992년, 옐친 대통령의 마지막 집권 해인 1999년, 푸틴 대통령 시기인 2001년을 각각 기준으로 삼았다.

12) [lcweb2.loc.gov/cgi-bin/query/r?frd/csydy:@field\(DOCID+ru0194\)](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ydy:@field(DOCID+ru0194)), p. 2.

<표-1> 소련군과 러시아군의 병력비교

(단위: 명)

소련군(1991년)	러시아군		
	1992년	1999년	2001년
현역: 340만 복무기간: 2년 예비군: 약 5,500만 (50세까지)	약 272만 18개월 약 2,000만 (50세까지)	100만 4,100명 18~24 개월 약 2,000만 (50세까지)	97만 7,100명 18~24개월 약 2,000만 (50세까지)
○ 전략핵군: 28만 ○ 지상군: 140만 (14개 군구) ○ 방공군: 47만 5,000 ○ 공군: 42만 ○ 해군: 45만 (4개 함대) ○ 기타 - 해외주둔군 - 준군사조직: 58만	○ 전략역지군(CIS 통제하): 18만 1,000 ○ 일반목적군(러시아군+ 몰 도바 주둔군+중앙아시아 CIS 합동군) - 지상군: 140만 (8개 군구) - 방공군: 35만 6,000 - 공군: 30만 ○ 해군: 32만 (4개 함대+카스피해 소함대) ○ 기타 - 해외주둔군 - 준군사조직: 52만	○ 전략역지군: 14만 9,000 ○ 육군: 34만 8,000 (6개 군구) ○ 공군(공군+방공군): 18만 4,600 ○ 해군: 17만 1,500 (4개 함대+카스피해 소함대) ○ 기타 - 해외주둔군: 3만 - 준군사조직: 47만 8,000	○ 전략역지군: 14만 9,000 ○ 육군: 32만 1,000 (7개 군구) ○ 공군: 18만 4,600 ○ 해군: 17만 1,500 (4개 함대+카스피해 소함대) ○ 기타 - 해외주둔군: 1만 8,650 - 준군사조직: 40만 9,100

출처: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36~45; *1992-1993* (1992), pp. 92~101; *1999-2000* (1999), pp. 112~118; *2001-2002* (2001), pp. 112~118.

다. 군사독트린 초안 마련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군사독트린을 유지하고 있던 러시아 정부는 냉전종식 직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미국과의 이해 충돌, NATO의 군비와 동구 확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련, 러시아는 “현재의 세계에서는 전세계적인 무력분쟁이 일어날 위험성은 현저하게 저하했지만, 그 한편에서 영토나 민족, 종교, 그 밖의 문제를 둘러싼 모순을 밑바탕으로 한 지역문제가 악화될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사태의 불안정화와 예기하지 않은 발전을 초래하고, 세계정세의 안정을 무너뜨릴 지도 모를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다”¹³⁾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둘째, 러시아 자신이 이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발트, 동구, 근중동 및 극동에서 타국,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중대한 이해를 천명해 온 미국과의 이해가 어느 정도 대립되고 있었다.

셋째, 미국 및 NATO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 군사력의 양적 감축이 새롭고 더 성능좋은 무기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는 무시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NATO가 약 2만 종류의 공중공격 수단과 러시아 국경 근처에 이들을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서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대규모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러시아는 NATO가 여러 분야에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걸프전에서와 같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동구국가들이 러시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표 대상으로 하는 군사·정치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자신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략상황을 심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⁴⁾

13) “『新生러시아軍』構築의 目的,” p. 80.

14) 러시아 군사상가들은 NATO 확대가 순수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NATO의

러시아는 자신의 국익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군이 창설되었던 1992년 5월 군사독트린 초안을 마련하였다.¹⁵⁾

이 군사독트린 초안은 옐친과 최고소비에트 및 CIS 국가수반평의회에 의해 채택된 국방문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이었다. ①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② 걸프전을 향후 재래식 전쟁의 표본으로 간주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 분쟁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의 창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전’(technological war)을 준비하기 위한 전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③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군수조달 대신 연구와 개발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 ④ 제한된 핵전쟁이 가능하고 러시아의 핵무기(또는 다른 ‘위협스런’ 목표들)에 대한 재래식 공격이 핵반응을 야기할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핵전쟁에 대해 변화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⑤ 고르바초프 ‘방어독트린’의 폐기와 ‘대규모 공격작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군사행동을 고려한다는 것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¹⁶⁾ 이 초안은 1993년 11월 채택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기초가 되었다.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구소련의 국경들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경우 러시아가 자신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지위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가 NATO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NATO가 러시아 안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고, 러시아의 NATO 정회원 가입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The NATO Issue,” [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ru0189\);](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ru0189);) Gerhard Wettig, “Moscow’s Perception of NATO’s Role,” *Aussenpolitik*. Vol 45, No. 2 (1994), pp. 123~133.

15) Mary C. FitzGerald, “Documentation: Chief of Russia’s General Staff Academy Speaks Out on Moscow’s New Military Doctrine,” *Orbis*, Vol. 37, No. 2 (Spring 1993), pp. 282~284.

16) *Ibid.*, p. 281.

3. 군사정책

1991년 말 러시아 출범 초기부터 1993년 11월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이 채택될 때까지 엘친 대통령이 수행하였던 대내 및 대외 군사정책은 아래와 같다.

가. 대내 군사정책

엘친 대통령과 구소련 시대 의회인 인민대표대회 및 최고회의 대의원들간의 개혁노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라쵸프 국방장관과 보안기관 장들은 자신들 휘하 병력의 중립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신 휘하의 장교와 사병들이 분열되어 있어서 명령을 수행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느 한 편에 대한 행동의 요구는 내전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라쵸프 국방장관은 2000년까지 병력을 150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시행하였다. 약 22만 명의 감축이 1992년 말까지 계획되었으나 병력 수의 급속한 감소로 시행되지 않았다. 모스크바에서는 10명 중 1명, 러시아의 기타 지역에서는 5명 중 1명만이 군복무를 마치는 실정이었다. 8년간 혼성직업군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전체 병력의 50%가 계약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되었다. 1992년 동안 약 10만 해외주둔 병력이 러시아로 철수하였다. 이들의 주택난 때문에 발트 3국으로부터의 러시아군 철수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러시아내 군의 지위는 열악하였는데 국방예산이 경제발전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선될 희망은 없었다. 따라서 군의 사기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었다.¹⁷⁾

1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러시아내 북 코카서스 지역에는 7개의 자치공화국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교도들이다. 1991년 8월 구소련에서 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체첸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두다예프는 연방조약¹⁸⁾ 체결을 거부하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2년 10월 북 오세티아 지역에서 잉구쉬인과 북 오세트인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신생 러시아 출범이후 최초의 무력충돌이었다. 이와 같은 소수민족들 간의 무력충돌 확산은 소연방 붕괴와 같은 러시아연방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고위인사를 파견하여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 지역문제를 두고 모스크바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었다. 하나는 코카서스 산악지대로부터 러시아가 철수하여 북 코카서스인들에게 독립을 허용하고 평지 어딘가에 새로운 국경을 획정하자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견해는 코카서스 산맥은 트랜스코카서스로부터 불안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지이고 이란이나 터키와 같은 남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어지이기 때문에 코카서스 산악지대로부터 철수는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에 해롭다는 것이었다. 잉구쉬-오세트를 평정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신속한 개입은 두번째 전략개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이 지역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이었다. 러시아는 단지 이 지역 안정을 위한 역외 보장자로서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였다.¹⁹⁾

1992-1993 (London: IISS, 1993), pp. 72~73.

18) 러시아내 21개 공화국 중 19개 공화국이 연방조약을 1992년 3월 31일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연방이 성립되었다.

19)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92-1993*, pp. 81~83.

나. 대외 군사정책

(1) 세계 및 동북아 차원

냉전종식에 따라서 엘친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 1992년 2월 2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가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은 미국과 구소련이 1991년 7월 31일 체결한 START I 규정보다 전략공격무기를 더욱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START I 조약을 미국 상원이 1992년 10월 1일 비준한 데 이어 러시아 최고회의도 11월 4일 비준하였고,²⁰⁾ 미·러 양국의 협상 결과 1993년 1월 3일 START II 조약이 체결되었다.²¹⁾ START II 조약은 START I 조약에 기초된 것으로 START I 조약이 전략공격무기의 핵탄두를 2001년까지 6,000개로 제한하였던 것을 START II는 2003년까지 3,000~3,500개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특히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MIRVed ICBMs)을 완전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러 양국은 탈냉전시대에 상응하는 전략공격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을 <표-2>과 같이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태 지역 안보·군사문제와 관련, 쿠나제 외무차관은 1992년 4월 13~15일 워싱턴에서 솔로몬 미 국무부 아·태 지역담당 차관보와 가진 아·태 지역 문제에 관한 양국간 첫 협의에서 핵무기기술 비확산과 군사대당트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6월에는 극동 러시아군 핵체제의 해체를 위한 미·러 양국간 협력이 논의되었다. 미국의 대러 경제 지원 확대 가능성과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이후 미·러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 START I 조약은 1994년 12월 5일 발효되었다.

21) START II 조약을 미국 상원은 1996년 1월 26일,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2000년 4월 15일 각각 비준하였다.

<표-2> START I과 START II하에서 미·러의 전략공격무기 보유수

전략무기	START I 이전 (1990. 9. 1)		START I	START II	
	소련	미국	CIS/미국 (7년간 3단계 이행)	러시아/미국	
				1단계 (7년간)	2단계 (2003년까지)
운반수단:	2,500	2,246			
ICBMs	1,398	1,000	1단계(~1997년): 2100		
SLBMs	940	672	2단계(~1999년): 1900		
중폭격기	162	574	3단계(~2001년): 1600		
핵탄두:	10,271	10,875	6,000	3,800~4,250	3,000~3,500
탄도미사일:	9,416	8,210	4,900	무제한 수준	감축
다탄두 ICBMs	5,958	2,000	1,540	1,200	0
SLBMs	2,804	5,760	무제한 수준 감축	2,160	1,700~1,750
중폭격기	855	2,665	무제한 수준 감축	무제한 수준	감축

출처: Oleg Sokolov/Yuri Klyukin, "Starting Off for a Secur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March 1993), p. 8;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 227~228.

1980년대 말에 중소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중국 군사관계는 확대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련 붕괴이후 동북아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중소분쟁의 한 원인이었던 동부국경선 문제를 일단락지었고 중국에 무기를 수출하였다.

국경문제와 관련,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16~17일 방중시 1991년 5월 체결한 『동부국경선 확정 협정』의 비준서를 교환하였으며, 쿠나제 외무차관은 10월 26일 방중시 구소련과 중국간 협의된 국경문제의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서부국경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10월 14일 코케이신 러시아 제1국방차관의 방중과 11월 24~26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의 방러 및 12월 17~19일 옐친 대통령의 방중시 체결된 『국경병력 감축 협정』 등은 중·러간 군사협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소련 붕괴이후 급감하였다. 구소련 시대에 전 세계에 대한 무기수출액은 1989년 143억 1,000만 달러이었으나 1990년 97억 2,400만 달러, 1991년 44억 4,800만 달러로 감소되었고, 1992년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은 20억 4,3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²²⁾ 미국이 1992년 2월 대만에 F-16 전투기 15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핵무기 적재가 가능한 ICBM과 중거리 폭격기 구입 계약을 10월 8일 체결하였다. 12월 2일 가이다르 총리가 최고회의에서 행한 연설에 의하면 러시아는 중국, 인도, 이란 3국에 22억 달러의 무기수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중 중국이 10억 달러를 차지하였는데 대금결제는 경화가 아니라 물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다.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시 북방영토 2개 도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10월 『소·일 공동선언』의 합법성을 승인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1991년 12월 28일 전격 수용하

22) SIPRI, *SIPRI Yearbook 1993: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 444.

23) *SIPRI Yearbook 1993*, p. 449.

였다. 1992년 1월 31일 개최된 러·일간 뉴욕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의 실무자 회의 등에서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이견이 노정되었다. 러시아는 ‘5단계 해결방안’(북방영토 문제 인정 → 북방영토의 비군사화 →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인 전환 → 평화조약 체결 →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을 제의했으나,²⁴⁾ 일본은 ‘2단계 공식’(북방 4도에 대한 러시아의 일본주권 인정과 평화조약 체결시 시코탄·하보마이 2개 섬 양도 및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 섬 이양일자 명시 →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 섬 양도)을 제시하였다.²⁵⁾

9월로 예정되었던 옐친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의 대러 경제원조와 북방 4개 도서 중 2개 도서(하보마이, 시코탄)의 대일 반환 연계에 대한 러시아 군부와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2년 7월 27일 실시된 『이즈베스티야』지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모스크바 시민의 65%가 북방도서의 반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군부는 캄차카 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레이더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핵잠수함의 태평양 진출 출구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북방영토의 반환을 반대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5단계 해결책에서 후퇴하여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도서를 우선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10월 7일 표명하였다. 이러한 옐친 대통령의 ‘선 2개 도서 반환, 후 협상’ 주장에 대해, 일본이 ‘4개 도서 일괄 반환’ 또는 ‘2개 도서 반환 후 나머지 2개 도서 반환’의 보장을 주장함으로써 북방영토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2) 한반도 차원

24) Vladimir Ovsyannikov, “USSR-Japan,” *New Times*(Moscow), no. 6, February 6~12, 1990, pp. 20~21.

25) *Izvestiya*, 1992. 4. 20.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서방국가들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한편,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과 군사교류·협력을 시작하였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을 새롭게 해석하였고 무기공급을 중단하였다.

(가) 북한 핵개발 저지

냉전종식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켜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성명을 통해 한국 내에 핵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 31일 남북한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북한은 1992년 1월 31일 「핵안전협정」을 서명하였다. 핵의 비확산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중대한 진전으로 간주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급변이 미국의 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연기, 미군의 감축준비 등 군사·정치상황 변화로부터 발생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⁶⁾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이 체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서방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고 남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벼랑끝 외교’를 수행한 것이 핵무기 개발이었다. 북한이 추진한 핵무기 개발 계획은 1990년대 전반기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반도 긴장을 야기하였

26) “Optimism Expressed Over North-South Relations,” FBIS-SOV-92-024, p. 38.

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역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북한에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였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1992년 6월 30일 이상옥 외무장관과의 면담시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이전 불허방침을 확인하였고 8월 16일 북한에 남북한 관계개선과 핵무기 개발중지를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또한 그는 서울을 방문하여 11월 20일 노태우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계속 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나) 한국과의 군사교류·협력 착수

러시아의 대한민국 군사정책과 관련, 양국간의 군사적 접촉은 소련시대인 1991년 모스크바와 서울에 양국 무관부가 각각 개설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소련 붕괴 직후인 12월 27일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소련의 법적 계승국으로 승인하였고,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19일 방한시 “원칙적으로 우리는 한국과 군사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²⁷⁾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송용섭 합참제1차장이 7월 27~29일 한국군 장성으로는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코코쉬 러시아 국방부 제1차관이 10월 4~8일 방한하는 등 양국군 고위인사들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11월 19일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 간의 서울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한·러 기본관계 조약』²⁸⁾이 체결되었는데 안보·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양국 관계에서 무력의 위

27) “Kozyrev Gives News Conference on ROK Trip,” FBIS-SOV-92-055, p. 30.

28) 외무부, 『러시아연방 개황』 (1995. 9), pp. 203~216.

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제2조 1항).

- 계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국제연합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노력한다(제2조 2항).

- 계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 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 외무장관, 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제4조 1항).

- 계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조직 범죄, 국제테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해상 항해 및 민간 항공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 행위 등을 진압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제12조).

또한 양국 대통령은 11월 20일 발표한 「한·러 공동성명」²⁹⁾에서 ① 군비경쟁의 완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감축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 ②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재확인, ③ 1992년 6월 미·러간 「한반도 핵 비확산에 관한 공동선언」,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확산 방지 조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지지, ④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화 전환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지원 등을 밝혔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11월 19일 국회연설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아·태 지역안보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안보협의체’(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s) 형성을 제의하였다. 그는 국제적 무력분쟁 조정기구와 지역전략 연구센터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러시아가 방위에 필요한 수준까지 극동 군사력을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반도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강대국

29) 위의 책, pp. 189~202.

들의 보장 하에 있는 대량살상무기 자유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³⁰⁾ 이 외에도 정상회담에서 한·러 양국은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 합의서」를 통하여 군 고위장성 상호방문, 군사훈련 상호참관, 합정 및 비행단의 상호교환 등에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한·러간 군사교류의 확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비록 학술차원이기는 하지만 유럽 군축협상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보여 우리 측의 큰 관심을 야기하였다. 오멜리체프 CIS군 총사령부 제1참모차장은 유럽지역에서의 군축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그리고 한반도에서 신뢰와 선린의 분위기 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그는 먼저 아·태지역과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군사적 대치, 군비증강, 상호불신 등으로 유럽의 1980년대 초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군사훈련에 참관단 초청, 남한과 미군의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군사문제에 관한 상호정보 교환과 남북한 국방부간의 직통전화 개설 등 이러한 조치들만이 양국의 병력감축에 관한 대규모 회담이 시작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축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핵문제”라고 밝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은 - 상호사찰”임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이 IAEA에 모든 핵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³¹⁾

30) *The Korea Herald*, November 20, 1992.

31)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인터콘티넨탈 호텔, 1992. 6. 1), pp. 5~11.

(3) 대북 군사관계 축소

반면 신생 러시아의 대북 안보·군사 관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러시아의 남한중심 한반도정책으로 구소련 시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축소되었다.

러시아 외무성은 구소련의 해체 직후,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소련의 해체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61년의 동맹조약인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최초로 밝혔다. 특히 이 조약의 제1조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존속되는 경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분쟁에 항상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대미 및 대한민국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제반관계의 확대를 위한 선린 우호협력 조약의 체결이 절박하다는 러시아측의 인식 때문이었다.³²⁾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로가초프 엘친 대통령 특사는 1992년 1월 17일 평양 방문시 조약의 유지조건으로 무력불사용과 국제규범 준수를 북한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는 1961년 조약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을 받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³³⁾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남북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무기로 잘 무장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안보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보

32) “Ministry Official Reviews North Korean Ties,” FBIS-SOV-91-247, pp. 6~7.

33) *Izvestiya*, 1992. 8. 13.

장도 필요하다는 러시아의 인식 때문이었다.³⁴⁾ 이와 같은 러시아의 새로운 해석은 냉전시대의 공수동맹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방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2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열린 대통령은 대북한 무기공급을 중단했음을 통보하고 동맹조약의 제1조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의도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CIS의 군총참모장 삼소노프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1992년 3월 2일 평양을 방문하여 『1992~93 군사협력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양측간 군인사 교류와 정보교환, 군사무기 부품공급 수준의 군사협력 의정서일 가능성이 크다. 구소련은 북한에 대한 무기 및 군수물자의 최대 공급국이었으나, 러시아는 대외 군사원조 삭감방침과 무기 현금판매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첨단무기를 구매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1991년 7월 6일 동맹조약 체결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고르바초프에게 축전을 보내고 대대적 행사를 개최한 것과 달리, 1992년에는 이와 관련된 논평이나 공식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관계가 구소련 시대에 비교하여 약화된 것을 의미했다.

34)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24~25.

Ⅲ. 엘친의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1993)과 정책

1. 군사독트린 채택 배경

러시아는 1991년 말 소련 붕괴이후 약 1년간 전술한 바와 같이 친서방 외교를 수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우선 NATO는 1991년 채택된 '신전략개념'³⁵⁾을 바탕으로 「북대서양협력회의」(NACC) 형태로 동구국가 및 CIS국가들과의 외교적, 군사적 접촉을 제도화하였다. 1992~95년 보스니아 내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슬라브족인 세르비아계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과 외국투자 보장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외국의 투자총액이 1992년 2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말경에 러시아 정부의 국제정세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미국의 전반적 지배보다는 다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초강대국 시대는 종식되었고 미국 이외에 세계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는 서구, 중국, 일본, 다수의 지역강국 및 러시아이다. 둘째, NATO 및 서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전이 있었으나 이들의 기본정책들은 계속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는 서구와의 화해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점증적으로 러시아를 차별하면서 ‘하급동반자’(junior partner)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정치, 군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이념과 구소련공화국 및 동유럽의 상실

35) NATO가 냉전시기에는 가맹국 영역의 공동방위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1991년 2월 로마에서 NATO 가맹국 수뇌들은 NATO가 탈냉전시기에는 가맹국 영역 외의 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동맹의 신전략 개념’을 발표하였다.

로 서방에 의해 짓밟혔고 매달리고 있다. 셋째, 아·태지역은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어 러시아의 유라시아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은 아·태지역 통합과정의 밖에 있어 우려된다. 넷째, 제3세계는 세계 및 지역 위협의 기본원천으로 바뀌고 있다. 전체주의 이후 국가들과 최빈국들의 사회, 경제, 인종 문제로 야기되는 위기와 대립이 있을 것이고 지역강국들은 무력사용을 해서라도 자신의 영향권 확보를 추구할 것이다.”³⁶⁾

국제정세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러시아 정부는 안보이해를 중시하고 구소련 공화국과 동구에 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덜 서방적이고 동방과 남방에 정향된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1992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부시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민주당 정부로 변화되는 시점을 러시아 외교노선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 러시아는 출범 초기의 과도한 ‘친미 로맨티시즘’으로부터 벗어나 외교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1992년 12월 1일 발표한 「러시아 대외정책문서」³⁷⁾에 의하면 국가의 단기과제를 ① 러시아 주변에서의 무력충돌과 분쟁 방지, ② 구소련 공화국들에 약 30개 군사기지 유지, ③ CIS내 러시아인들의 인권보호, ④ 유럽, 남아시아, 극동에서의 지역 패권국가 출현 방지, ⑤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일정한 지위와 기능의 보유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어떠한 국가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36) “Foreign Ministry Document Outlines Foreign Policy,” FBIS- SOV-92-232, pp. 3~5; Alexei Arbatov, “Empire or great power ?” *New Times*, 1. 93, p. 24; Suzanne Crow,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May 1994), pp. 1~6.

37) “Foreign Ministry Document Outlines Foreign Policy,” FBIS-SOV-92-232, pp. 3~5.

이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는 각 지역별로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CIS 내에서 러시아가 구소련의 핵전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단일 경제권을 유지하며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한다.

- 동구가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 고립시킬 일종의 완충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서방 강국이 러시아를 동구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억제한다. 새로운 기초 위에서 동구국가들과 점차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미국과 전략적 우호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되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되는 것을 저지한다.

- 지역강국이고 개도국중 러시아의 주요 무력상대국인 인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란과 아프카니스탄 등이 민족적, 종교적 긴박하에 CIS내 이슬람 국가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저지해야 하고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

-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립주의적 감정을 탈피한다. 특히 미, 중, 일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잘 균형되고 안정되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아·태지역의 안보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 대일관계에서 전후 유산인 평화조약과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여 일본의 자본을 유치한다. 대량파괴무기를 만들려는 북한의 계획을 우려하며 한국과 무역,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상기와 같은 대외정책 목표를 설정한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 동구에 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CIS와 중동 및 아시아 지역도 중시하는 유라시아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NATO의 확대를 방지하고 CIS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통합을 위해 「CIS 헌장」을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민스크 회의에는 CIS 12국 중 10국이

참가하였고 「CIS 헌장」에는 7국만이 서명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마련된 군사독트린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옐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와 소련 시대 의회인 최고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승인되지 않고 있었다. 옐친 대통령은 보·혁간 대립이 첨예화되자 1993년 9월 21일 초헌법적 조치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민주헌법을 채택하기 위한 국민투표와 다당제 총선을 12월 12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보·혁 대결과정에서 노정된 군의 분열상을 타파하고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제거하며 군 개혁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러시아 군의 존재기반이 되는 군사독트린을 11월 2일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하게 되었다.

2. 군사독트린의 내용과 특징

군사독트린에 대한 공식적인 러시아의 정의는 “현대 전쟁들의 본질과 그 전쟁들에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해, 또한 국가와 전쟁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그 국가의 군사력에 관한 견해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필요사항에 대해,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기초된 견해들의 체계”³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소련붕괴로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의 방어적 군사독트린을 승계하게 되었으나 1990년대에 적합한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안보·

38) “a nation’s officially accepted system of scientifically founded views on the nature of modern wars and the use of armed forces in them, and also on the requirement arising from these views regarding the country and its armed forces being made ready for war.” [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ru0182\)](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ru0182)).

군사 전략가들은 1992년 5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약 17개월만인 1993년 11월 2일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군사독트린의 특징은 2000년경까지만 적용하기 위한 과도기적 군사독트린이었다는 점이다.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 안보개념의 구성부분이며 과도기, 즉 국가체제가 확립되고 민주개혁이 실행되며 새로운 국제관계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의 문서로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기본규정」³⁹⁾을 채택하였다. 이는 1993년 10월 3일 및 6일 개최된 러시아연방 안보위원회 석상에서 심의되었으며, 안보위원회는 11월 2일 최종문건을 승인하였다. 같은 날 이 군사독트린은 대통령령 1833호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문건은 서론과 군사독트린의 정치적 원칙, 군사적 원칙, 군사기술·경제적 원칙의 세 부분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이 군사독트린이 상기와 같은 과도기의 문서이며 전쟁과 무력분쟁의 방지, 군사력 건설, 국가의 방위 준비,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연방군 및 기타 부대의 사용 등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첫째, 「I. 군사독트린의 정치적 원칙」에서는 ① 무력분쟁, 러시아 연방군 및 기타 부대의 사용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 ② 전쟁위험의 주요 원천, ③ 러시아연방의 군사안전의 사회적·정치적 보장을 위한 정치적 원칙과 기본방향, ④ 군사안보 부문에서의 국가의 임무가 서술되어 있다.

「1. 무력분쟁, 군 및 기타 부대의 사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국제정세를 이데올로기에 의해 발생하는 대립의 극복, 파트너십과 다방면적 협력의 확대, 군사면에서 신뢰성의 강화, 핵 및 재래식 무기

39)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 「중소연구」, 18권 1호 (1994 봄), pp. 236~248.

의 축소 등으로 특징지우고 정치·외교적, 국제법적, 경제적 및 기타 비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단행동을 통한 전쟁과 무력 분쟁의 방지에 우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안전과 이익의 보장이 내정면에서는 경제·정치·사회문제의 해결, 개혁의 성공적 수행, 외교면에서는 주변세계, 특히 인접국가 및 선진강대국과의 국가관계에 달려있으며, 러시아는 어떠한 국가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독트린은 ‘잠재 적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때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군 및 기타 부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러시아가 방어적 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군사독트린은 핵무기 부문에서의 목적을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침략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핵비보유 NPT 가맹국에 대해 ① 핵무기 보유국과 동맹조약을 맺은 국가가 러시아나 동맹국을 무력침략하는 경우, ② 해당국가가 핵무기 보유국과 함께 러시아와 동맹국에 공동행동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의 경우를 매우 한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비보유국에는 핵공격을 삼가고 핵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구소련 시대의 군사독트린과 비교할 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범위는 현저히 확대되었다. 이 외에 핵무기 실험금지, 대규모 전쟁 방지 및 전략적 안정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핵전력 축소,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의 완전한 실현과 그 가맹국의 확대 등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 군사독트린은 러시아에 대한 침략발생의 직접적 위협은 현

저히 감소되었으나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2. 러시아에 대한 주요한 현존적 혹은 잠재적 전쟁위험의 원천’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① 타국의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영토 주장, ② 러시아의 직접적 인근지역에 있어서의 국지전 혹은 무력분쟁의 현존적 혹은 잠재적 불씨, ③ 일련의 국가에 존재하는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사용 가능성, ④ 핵무기, 그 운반수단 및 최신 군사기술의 확산, ⑤ 군비제한 및 군비축소에 관한 국제합의의 위반, ⑥ 타국의 질적·양적 군비확장에 의한 전략적 안정성의 붕괴 가능성, ⑦ 러시아의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블럭 및 동맹의 확대, ⑧ 국제테러리즘 등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쟁위험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전쟁위협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① 러시아 국경지역에서 기존의 세력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군 증강, ②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공격, ③ 국경분쟁 혹은 무력도발의 발생, ④ 유엔안보리 혹은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집단안전보장 지역기구의 결정에 따른 평화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되지 않은 러시아와 인접하는 국가로의 외국군의 진주, ⑤ 러시아 국내상황의 불안정화 및 영토보전의 침해를 목표로 무력강제력을 이용하여 실행되는 민족주의적, 분리주의적 조직 및 기타 조직의 위법활동 등이다.

안보·군사문제에 대한 상기와 같은 인식과 판단을 기초로 군사독트린은 러시아 군사안보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군의 질적 상태와 전투능력을 러시아 국익 보장 수준으로 확보, ② 무력정책의 포기, 군사력의 사용 혹은 사용위협을 배제를 위한 양자 혹은 다자간 합의체제 강화, ③ 집단안보기구에 편입 및 그러한 기구와 협력관계 확립, ④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 국제기구를 완비하고 새로운 효과적인 국제기구 창설,

⑤ NPT 가입국 확대, 대량파괴무기 금지체제에 개발잠재력을 지닌 모든 국가의 편입, ⑥ 핵군축회담에 다자적 성격 부여, ⑦ 핵실험을 핵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그러나 핵무기의 개선은 배제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다.

둘째, ‘II. 군사독트린의 군사적 원칙’에는 러시아연방의 군 및 기타 부대의 ① 운용원칙, ② 임무 및 그 관리의 조직, ③ 구성의 기본 목적, 원칙 및 임무, ④ 조직의 기본원칙이 서술되어 있다.

‘4. 러시아연방군 및 기타 부대 조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1996년까지 국외배치 부대의 철수를 완료하고 징병제와 계약지원병제를 복합시킨 혼합병제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하며 병력 수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1996~2000년 시기에 군의 재편, 혼합병제로의 전환, 러시아연방 영토상의 전략단 구성 및 군사인프라스트럭처 완성, 어떠한 지역으로도 이동·전개·기동 가능한 기동부대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III. 군사독트린의 군사기술·경제적 원칙’에서는 ① 러시아연방군 및 기타 부대의 무기체계, 군사-전문설비, 군수품에 대한 수요보장의 원칙, ② 군사-기술적 군사안전보장 및 방위산업능력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원칙적 방향, ③ 러시아연방의 군사·기술적 안전보장의 우선순위, ④ 방위산업 능력발전의 원칙적 방향, ⑤ 러시아연방의 대외 군사기술적 협력, ⑥ 군사기술적 협력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5. 러시아연방의 대외 군사기술적 협력’에 의하면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정책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균형있게 보장할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6. 군사기술적 협력의 목적’에 의하면 러시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국의 군사정책적 입지를 강화하고 재래식 병기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의 국가 수출역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마지막 ‘IV. 결론’은 이 군사독트린이 전반적 안보개념을 개발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러시아연방 군사안보의 노선과 수단을 규정하는 그 구성부분으로서 러시아 정치체제의 확립 및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축에 따라 보충되고, 구체화되며 또한 완비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엘친의 군사독트린은 ‘잠재 적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념에 근거한 서방세계와의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소련의 양적 우세에 기초한 공세 독트린 및 대규모 공세작전을 거부하고 전투행위를 자국 영내에 한정하였던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독트린과 비교할 때 엘친 대통령의 군사독트린은 그 자체가 방어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군사독트린은 안보 위협을 상정하는 근거와 접근방식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실체와 규모 면에서, 선제 핵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군사독트린은 탈냉전 시대에 세계대전의 위협은 감소한 대신 지역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군사적 위협의 근원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토상, 종교적, 민족적, 그 외에 다른 갈등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 및 정치세력들이 군사적 수단으로 이들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군사독트린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들을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던 소련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모두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에 대한 대비에 특별한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협의 근원을 직접

적인 침략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성, 군사력 확대, 핵무기 및 핵 잠재력의 확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CIS 국가들, 러시아와 CIS 국가들 사이의 갈등, 러시아연방 자체내 민족간 무력충돌 가능성, CIS내 러시아인들의 시민권 위협, 러시아의 인접국이나 국경 인근지역에 대한 외국군의 침공 등에서 찾고 이에 상응한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둘째, 구소련하의 군사사고는 세계 국가들을 이념적 근거 위에서 동맹 진영과 적대 진영으로 이분하였던 반면, 이 군사독트린은 국익 수호라는 다른 원칙에 근거해서 안보 위협을 규정, 이를 토대로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과 수단들을 기술하고 있다. 즉 군사독트린은 러시아의 국익을 위협하는 근원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특정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욕구'가 아니라 서방 국가의 집적된 군사력 존재 자체 및 러시아와 CIS 인근지역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전력 투사능력, 러시아 국경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신속기동병력을 포함한 유럽의 NATO 군사력과 미국의 극동 주둔병력, 서방의 경제원조를 대가로 러시아 국익에 상반하는 정치적 양보의 강요 가능성, 독일·일본·이란·터키와 같은 지역 패권국들의 등장과 군사력 팽창 등에서 찾고 있다.

셋째, 군사독트린이 제시하고 있는 핵전략의 새로운 방향이다. 구소련은 핵공격이 있을 때에 대응해서만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핵비보유국들에게는 핵공격을 삼가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 군사독트린은 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비핵국이 러시아, 러시아의 영토 정규군 및 여타 부대, 또는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해 무력 공격할 경우와 ②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비핵국이 합동작전으로 러시아, 러시아 영토 정규군 및 여타 부대, 또는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해 침략 혹은 무력공격을 감행·지지하는 경우에 핵 선제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가 핵전략을 현실화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 설명이 주어질 수 있다. ① 소련 붕괴이후 전력 약화와 「유럽재래식전력 감축협정」(CFE) 준수에 따른 군비의 우랄 이동지역으로의 이전 및 대규모 감축으로 재래식 전력으로는 유사시 러시아를 방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 ②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로루시가 새롭게 핵 보유국가로 변모함으로써 이들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CIS 및 동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NPT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NATO와 「서유럽연맹」(WEU)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오늘날 최첨단 재래식 무기체계의 가공할 만한 화력 및 정밀도는 핵공격의 그것과 비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는 구태의연한 전략개념이 되어 버렸다는 점, ⑤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재래식 군비의 현대화보다는 핵전력의 비중을 강조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점, ⑥ 연방 붕괴와 동유럽의 탈소비에트화, 러시아 국내 정국의 불안 및 경제 파국으로 인해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된 러시아에게 핵무기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시켜 준다는 정치심리적 과시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다.⁴⁰⁾

3. 군사정책

가. 대내 군사정책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이 채택된 1993년 11월부터 엘친 대통령이 전격 사임한 1999년 12월말까지 러시아의 중요한 대내 군사정책을 군 개혁과 체첸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0) 심경옥,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내용과 의미,” 「국방논집」, 제26호 (1994년 여름), pp. 171~177.

첫째, 러시아 국방부에 의하면 병력감축, 군구와 군사력 명령구조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군 개혁의 제1단계가 1998년 말까지 완료되었다. 2001년까지의 다음 단계는 작전 준비태세와 장비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9년 4월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은 병력감축이 120만 명에 이르러 더 이상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에 러시아 국방부는 10만 9,000명의 장교를 해고했고 다수의 직책 및 지원과 훈련 시설들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완전한 직업군인 창설을 위해 1996년 대통령령에 의해 세워진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반면 1998년 12월 열린 대통령은 군이 무력분쟁 상황에서 단지 직업 하사관과 사병들만을 이용할 의무가 더 이상 없고 징집할 수 있다는 포고령에 서명하였다. 이 포고령은 직업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조건들, 특히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면 이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은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구 재조정은 1999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했다. 첫 조치는 1998년 11월 21일 시베리아 군구와 트랜스바이칼 군구의 통합이었다. 볼가 군구와 우랄 군구의 통합이 마지막 조치로 계획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육·해·공군 및 전략군 4개 군종으로의 개편이 완료되었다. 마지막 조치는 1998년 말에 완료된 공군과 방공군의 통합이었다. 육군은 42만 명으로부터 약 34만 8,000명으로 축소되었다. 지상군 중 야전군은 다양한 형태의 24개 작전사단과 13개 훈련 또는 간부양성사단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 중반까지 레닌그라드 군구, 모스크바 군구, 북 코카서스 군구, 시베리아 군구에 있는 3개 사단과 4개 여단이 '상비부대'들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적어도 각 부대 병력 수의 80%를 유지하고 100%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들이다.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부대들은 병력수의 10~15%만이 완전 무장되어 있다.⁴¹⁾

둘째, 1991년 말 체첸의 독립을 선언한 두다예프 대통령의 도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군이 파견되어 1994년 12월 체첸 전쟁이 시작되었다. 1996년 4월말까지의 제1차 체첸전쟁에서 전투기와 탱크 등 대규모 화력을 동원한 러시아군이 체첸 반군들을 남부 산악지대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로 내몰 수 있었다. 그들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친 엘친 대통령은 휴전을 모색했으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다예프 대통령은 폭격으로 4월 사망하였다. 대선을 앞둔 엘친 대통령은 안다르비예프 신임 대통령과 5월 회담을 갖고 6월 1일부터의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체첸 주둔 러시아군은 그러한 합의를 거부하였다. 엘친 대통령이 8월 재취임하였을 때 체첸군은 수도 그로즈니를 재탈환할 수 있었다. 엘친 대통령에 의해 체첸 문제 특사로 임명된 레베드는 9월 체첸과의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와 체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은 군대철수와 여러 가지 재정 및 예산 업무를 감독하고 체첸공화국의 사회·경제 시설을 복구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주민들에게 식량과 약품을 제공할 공동위원회를 1996년 10월 1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7년 1월까지 러시아군이 철수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체첸공화국이 러시아의 일부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같은 달 체첸 대통령 선거에서 마스하도프가 당선되었고 그는 체첸이 이미 독립국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따라서 러시아와 체첸 간에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체첸 반군들이 이웃 다게스탄 마을들을 점령함에 따라서 1999년 8월 체첸에 대한 러시아군의 제2차 공격이 감행되었다. 엘친 대통령의

41)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London, IISS, 1999), pp. 104~105.

4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96/97* (London: IISS, 1997), pp. 128~129.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신임 총리로 임명된 푸틴이 강경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그의 인기가 8~9월 2~4%에서 10~11월 30% 이상으로 급상승하였다.⁴³⁾

나. 대외 군사정책

1993년 11월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을 채택한 엘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발표된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응하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4월 25일 구축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96년 여름 대통령에 재선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유라시아외교를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전방위외교로 전환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균형된 외교정책을 수행할 때, 즉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웃 국가들 및 세계중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때 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경제난 등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⁴⁴⁾ 따라서 엘친 대통령이 군사독트린을 채택한 1993년 11월 이후부터 1999년 12월 사임 시까지 수행한 대외 군사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러시아 외교노선의 재조정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4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4th quarter 1999* (London: EIU, 1999), p. 6.

44) 러시아의 전방위외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중소연구』, 20권 2호 (1996 여름), pp. 336~352; “러시아 대통령 의회 연두교서 연설,” 『중소연구』, 20권 4호 (1996/7 겨울), pp. 233~239; “Russian Federation National Security Blueprint,” FBIS-SOV-97-364, pp. 1~18 등 참조.

(1) 세계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군사독트린 발표이후 미국과 전략적으로 상호신뢰를 강화하였으나 러시아의 독자외교 강화로 국제현안에서 대립과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엘친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 유라시아외교를 전방위외교로 전환함에 따라서 러시아와 NATO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러시아의 대미 안보·군사 협력기반이 강화되는 듯 하였으나, 1999년부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과 코소보 사태 및 러시아의 대이란 핵·미사일 기술수출 문제 등으로 러시아와 미국 간에 갈등면이 부각되었다.

군축분야에서, 1994년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감축노력을 지속하였다. 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엘친 대통령, 클린턴 미 대통령, 클라프츠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미·러 양국은 「핵무기 상호겨냥 중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미·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6월 22일 러시아와 NATO 간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PFP) 서명, 9월 2~10일 러시아 영토 내에서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엘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9월 28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START I이 발효되고 START II가 비준되면 전략핵탄두의 해체를 시작하여 전략핵 감축을 목표시기인 2003년보다 더 일찍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NPT의 무기한 연장과 핵물질의 밀수 방지를 위한 협력, 핵탄두 저장에 관한 정보교환, 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⁴⁵⁾ 이로써 러시아는 미국과 전략적 차원에서 상호신뢰를 강화하였다. 우크라이나가

45) "Clinton, Yeltsin Sign Strategic Agreement," FBIS-SOV-94-191, pp. 1~2.

NPT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4개 구소련 핵보유국과 미국은 START I을 1994년 12월 5일 발효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5~96년 기간중 러시아와 미국간 핵군축 노력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 러시아에서는 1993년 12월 연방하원인 국가두마 선거이후 부상한 공산당 등 좌파와 극우민족주의 세력은 미국이 ABM 개발을 지속하는 한 START II를 비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서도 1994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다수파인 공화당 의원들이 ABM망의 조기 배치를 주장하면서 START II의 비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NATO의 동구 및 CIS에 대한 확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인식하에 NATO 확대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한편, 미국과 이미 체결한 군축조약의 내용상 불평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약과 협정의 이행을 거부 또는 유예하였다. 1996년 1월 26일 START II를 비준한 미국은 외무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 측에 START II의 비준을 촉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NATO 확대문제와 연계시키면서 START III 협상의 조기개최를 요구하였다.

군축문제에서 미·러간 답보상태를 해소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엘친 대통령이 1996년 여름 대통령에 재선되어 기존의 유라시아외교를 전방위외교로 전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7~98년 시기에 러시아는 미국과 안보·군사 협력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미·러 양국은 1997년 3월 20~21일 헬싱키 정상회담을 통해 군축관련 4개의 공동성명과 경제관련 1개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코언 미국방장관과 「미·러 군사협력협정」을 5월 13일 체결하고 공동 군사훈련과 상호방문 확대, 핵무기 통제체제 유지 등 군사·안보 면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START II에서 2003년 1월 1일로 규정한 양국 장거리핵미사일의 감축시한을 2007년 말로 연장하고 당초 해체 대상 미사일의 퇴역을 2003년 말에 완료하기로 하는 2개의 합의에 9월 26일 서명하였다. START II의 이행시한이 수정되었으나 러시아 의회가 국내문제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비준 가능성은 희박하였다.⁴⁶⁾

러시아 해병 1개 소대가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에 따라서 1998년 5월 18~29일 덴마크와 그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군사 훈련에 최초로 참여하였다. 8월 17일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공동 안보도전에 관한 공동성명서」⁴⁷⁾를 채택했는데, 이에는 양국 플루토늄 비축량의 50톤 감축, 제 3국의 미사일 발사 정보 및 조기경보에 관한 정보 교환,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확대 등 6개 항이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1월 25~27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프리마코프 총리,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START II비준,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이 NMD 구축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ABM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NATO군이 유고 공습을 3월 24일 단행하자 미·러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를 비난하고 START II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3월 26일 결정하였다.

이후 미·러 양국은 ABM 조약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확산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러시아는 ABM 조약 개정시

46) SIPRI Yearbook 1998, pp. 408~409.

47) "Russia: Yeltsin, Clinton Statement Summarized," FBIS-TAC-98-246, pp. 1~2.

양국간 전략적 균형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뢰 확보를 위해 NMD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공유 방안을 9월 12일 제시 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는 미국의 ABM 조약 개정 의도에 대해 불신을 표명하면서 START II 비준과는 별개로 START III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등 군축문제를 둘러싼 미·러간 이견대립이 지속되었다.

(2) 동북아 차원

(가) 대미정책

미국과 동반자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의 친미외교를 탈피하고 독자외교인 유라시아외교를 강화함에 따라서 현안 해결을 둘러싼 양국간 대립과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1996년 엘친 대통령의 재집권이후 추진된 전방위외교에 따라서 대미관계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에 의해 다시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블라디보스톡 부근 해역에서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등 인도적 임무수행을 위한 최초의 합동훈련을 1994년 6월 18~23일 실시하였고 이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 전반기 동안 역내 국제안보의 불안 요인이었다. NPT 체제 유지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면에서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미·러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북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1994년 5월 30일 주도한 바 있으며, 6월 13일 북한의 IAEA 탈퇴 선언 이후 대북한 제재를 모색하기도 하였

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 등 서방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노력으로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제네바합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기본적으로 환영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견제하려 하였다. 1996년 4월 17일 미국이 일본과 신안보체제를 확립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4월 25일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어 이에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 안보 질서는 미·일 대 중·러간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5월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러 국방장관회담시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코언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6월 20~22일 덴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 및 수출의 중단을 촉구하고 4자회담 개최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에 핵동결 조치의 지속과 남북대화 참석 등을 요구하였다.⁴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의 국제 협력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9월 25일 일본측에 적절한 설명을 촉구하였다. 한편 엘친 대통령은 11월 7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미국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1997년 아·태지역에 대한 미·러 양국의 무기수출 경쟁은 이전보다 심화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들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무기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기득권 세력인 미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SU-27 전투기의 기술이전

48) 『세계일보』, 1997. 6. 23.

문제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S-300 미사일 수출을 모색함으로써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과 갈등을 겪었다.

1998년 일년 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미·러관계에 나타난 협조와 견제라는 특징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전략무기감축 계획의 틀 안에서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해군기지를 3월 2~6일 시찰하고 협정이 옮겨 이행되고 있는 가를 검사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 지역에서 미국 제7함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 간에 재난지역에서의 구조작업을 훈련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8월 6~7일 실시되었다. 또한 북한이 8월 31일 중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9월 1~2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미사일 발사와 사전예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NMD 구축을 시도하였고, 일본과 함께 TMD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안보와 군사면에서 미·러 양국의 협조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미·일 간의 TMD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9년 미국은 NMD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ABM 조약 개정에 동의해 주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러시아의 미사일 추적 레이더 기지를 완성시켜 주겠다고 비밀리에 러시아에 제안하였다.⁴⁹⁾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10월 21일 ABM 조약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군축·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9) *The New York Times*, October 17, 1999.

(나) 대중정책

러시아는 대중정책과 관련, 정상 및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러시아의 대중 무기판매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고,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확립 이후 군사기술 협력관계가 심화되었다. 이는 중·러 양국이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특히 1995년에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중국과 안보·군사 면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중국측에서는 5월 강택민 국가주석, 6월 이붕 총리, 9월 전기침 외교부장 등의 최고위 인사들이 방러, 엘친 대통령 및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 50주년을 맞아 5월 7~10일 개최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쌍무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역량 확대 및 동부국경선 획정의 준수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양국의 이란에 대한 원자로 제공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양국의 총리와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군사와 경제협력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5월 15~20일 그라쵸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고위 사절단의 방중시 양국 국경지대 군비와 병력의 상호감축과 군사방위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문안 등이 마련되었다.

중·러 간의 이와 같은 최고위 인사들의 상호방문과 군사교류의 강화는 양국관계를 어느 시기보다도 밀착시켰다. 이는 중국이 긴밀한 대러관계를 통해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과 미·대만 관계의 복원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중국과의 선린우호관계 및 군사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동유럽으로의

NATO 팽창에 직면하여 동부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무기판매 확대정책이 중국의 군현대화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어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판매와 첨단 군사장비 및 기술의 이전이 증가되었다. 1992~94년간 50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바 있는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우려 속에서 킬로(Kilo)급 공격 디젤잠수함 4척을 1995년 1월 러시아로부터 구입함으로써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관련국들 및 대만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중국은 1995년 6월에 걸친 군사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SU-27 등 최신예 전투기들의 라이선스 생산과 MiG-29와 MiG-30의 중간형인 섬(殲) 10 전투기의 합작생산에 합의하였으며 항공, 통신 및 전자관련 첨단기술들의 이전을 러시아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러시아 국방부의 후원하에 10월 10일 중국 남해도에서 개최된 군사기술박람회에는 30여 러시아 군수업체가 참여하여 100여 종의 첨단 군사장비들을 전시하였다. 이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신형 SU-27 전투기 24대,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와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AA-10 중거리 미사일 144기 및 AA-8 단거리 미사일 96기 등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러시아산 군사무기와 군사기술 도입은 미·중과 중·대만간 뿐만 아니라, 미·러간 갈등요인이 되었다.⁵⁰⁾

1996년 중·러 양국은 세계 및 지역안보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강택민 국가주석과 열린 대통령이 4월 25일 북경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21세기를 대비해 평등, 상호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임을 표방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⁵¹⁾ 중·러간

50) SIPRI Yearbook 1996, p. 494.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국경선 주둔 병력 감축협상을 통해 양국간 신뢰구축이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실현되었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미·일 양국이 4월 17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자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지목한 데 대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확대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은 미국 주도하에 있는 NATO의 확대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1996년에도 중국의 러시아 군사무기 도입은 확대되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공동으로 잠수함, 미사일 방수시스템 및 신형공격기 슈퍼 7 등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12월 초 55억 달러 상당의 SU-27 전투기 55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중국과 정상회담, 정부와 군 고위인사들의 상호교류,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였다. 특히 1999년 양국은 코소보 사태와 미·일의 TMD 계획, 체첸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호입장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공동 대처하였다. 엘친 대통령의 발칸위기 문제 특사 체르노미르딘 전 총리가 5월 12일,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6월 1~3일 각각 북경을 방문하여 강택민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코소보 문제와 관련한 양국 입장을 조율하였다. 양국은 이 문제가 유엔결의안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NATO 공습이 즉각 중단되어

51) “Joint Statement Issued on “Strategic Partnership,”” FBIS-CHI-96-081, pp. 1~2.

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8월 24일 북경에서 개최된 양국 경제협력 회의에서 최첨단 기종인 SU-30 전투기 약 40대와 핵잠수함 2척을 판매하기로 중국측과 합의하였다.

엘친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8월 25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제4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양국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였다. NATO의 동구 확대와 미·일의 TMD 계획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5개국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슈케크 공동선언」⁵²⁾을 같은 날 채택하였다. ① 미국과 NATO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불만 표시 및 중앙아시아 역내의 새로운 협력체제 필요성, ② 5개국 국경지역 병력감축과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 ③ 이슬람 근본주의, 분리주의, 국제테러, 마약 밀매에 대한 공동대응, ④ 카스피해 유전 및 천연자원 공동개발 등이다.

또한 엘친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12월 9~1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을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국이 된 미국의 패권주의적 발상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신간섭주의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유엔과 국제법 기초의 다극세계로 건설, 미·일의 TMD 체제 구축 및 대만의 참여 반대, 대이라크 경제제재 취소와 정치적 해결, 유엔 결의에 따른 코소보 사태의 해결, 대만의 양국론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와 체첸사태에 대한 순수한 내정문제 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12월 10일 채택하였다.⁵³⁾ 또한 전날 외무

52) “Leaders Sign Joint Statement at Summit,” FBIS-CHI-1999-0826, pp. 1~4.

53) “TTAR-TASS: Russian-Chinese Statement,” FBIS-SOV-1999-1210, pp. 1~4.

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서부국경선 50km와 동부 국경선 4,300km에 대한 확정문제를 종결하는 3개 협정이 서명되었다.

(다) 대일정책

러시아는 일본과 고위인사 교환방문, 군인사 교류 등을 통해 안보·군사협력을 증진하였다. 그러나 북방영토 문제와 일본의 TMD 구축 문제는 러·일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1993년 군사독트린에서 ‘적대국가 부재’를 선언하였고, 일본도 「1994년 방위백서」에서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에서 제외시켰다. 러·일 양국은 1994년 2월 3~4일 외교·국방 관계자가 참석하는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에서 「방위정책 대강」과 군사독트린을 각각 소개하였으며,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국방정책에 대한 투명성 보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동해상에서 합동수색 구조훈련을 9월 14일 최초로 실시하였고, 11월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일·러 안보심포지움을 통해 군사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안보군사 관계의 확대를 통하여 러시아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주도를 견제하고 역내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 반면, 일본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북방영토 문제 등 러시아와의 현안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 협력분야가 안보·군사 면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양국의 최대 현안인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는 진전되지 않았다. 러·일 양국은 북방영토 문제를 엘친 대통령의 1993년 10월 방일시 합의된 「도쿄선언」(“기존 협정들에 입각하여 처리한다”)에 따라서 교섭하기로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러시아의 ‘선 경험

후 영토협상' 입장과 일본의 '정경불가분의 원칙' 입장의 대립으로 답보상태가 계속되었다. 특히 그라초프 국방장관은 극동군구와 태평양함대가 러시아 안보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방영토에 약 2만명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임을 1994년 10월 24일 표명하였고,⁵⁴⁾ 체르노미르딘 총리도 북방영토의 반환 가능성을 11월 6일 일축하였다. 북방영토 문제는 소스커베츠 러시아 제1부총리의 11월 27일 방일시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러시아 총선이후 보수파의 영향력 강화로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웠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종전 50주년인 1995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옐친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개혁문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긴밀한 미·일 안보협력의 유지 하에 주변국들과의 안보대화·방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뢰증진을 도모해 나간다는 1995년 11월 「신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우스이 방위청 장관이 전후 최초로 1996년 4월 27~30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 국방정책 공표, 고위 국방당국자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체체바토프 러시아 극동군 사령관이 최초로 5월 27일 방일하고 일본은 구축함을 71년만에 러시아 해군 창설 300주년 기념식 참석차 블라디보스톡에 7월 26~29일 파견하는 등 러·일 양국간 안보대화 및 방위교류가 확대되었다.

북방영토 문제는 13개월 만에 재개된 10월 2~3일 동경 실무회의에서 일본이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시한설정을 요구한 반면, 러시아는 양국간 관계진전에 맞춰 시간을 갖고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양국 대표들은 쿠릴열도 공동개발과 쿠릴 남부 도서-일본간 무비자 방문, 쿠릴 남부수역에서의 어로협력 등 다양한

54) 『중앙일보』, 1994. 10. 25.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영토교섭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⁵⁵⁾

상기와 같은 안보·군사협력 추세는 지속되어 1999년에도 러·일 양국은 다양한 고위인사 교환방문, 군인사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TMD 구축문제는 양국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부치 일본총리는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러시아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대러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할 것이라는 의지를 1월 19일 표명하였다. 그는 8월 31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엘친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안보·군사 분야에서 나츠가와 일본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크바시닌 러시아 참모총장과 자하렌코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군 고위인사 교류를 활성화 하였다. 일본은 구소련 핵무기 해체시 발생하는 플루토늄 처리, 러시아 극동함대의 원자력 잠수함 해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6월 18일 발표하였다. 노로타 일본 방위청 장관이 8월 16~19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국방장관 상호 교환방문과 합동훈련 지속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교류 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국은 수색, 구난 합동훈련 실시, 러시아군 장교의 일본 자위대 견학,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노로타 방위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저지를 위한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정치,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NMD 체제 등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 러시아는 일본에게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⁵⁶⁾

55) “Russia: Deputy Foreign Minister Hails Japanese ‘Understanding,’” FBIS-SOV-96-195, pp. 1~2; “Russia: Japan Considering Joint Economic Projects on Kurils,” FBIS-SOV-96-195, pp. 1~2.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일본은 1993년 10월 「동경선언」에 입각하여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러외교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북방 4개 도서 원주민의 무비자 일본 방문을 확대하였을 뿐,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러간의 기본적인 입장차이는 변하지 않았다.

(3) 한반도 차원

러시아는 친서방외교 노선 및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남한 중심의 한반도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라시아 외교노선으로의 전환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투자, 약속된 30억 달러 중 14억 7,000만 달러만 집행된 상태에서 1993년 8월 한국의 경협차관 제공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1994년 후반이후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균형된 남북한정책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말까지 안보·군사면에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안정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 한반도 안정 유지

한반도에서는 남한 사람들의 금광산 관광과 북한에 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정의 1996년 9월 강릉과 1998년 6월 속초 앞바다 침투사건,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등에서 나타

56) "Russia, Japan Military Heads Discuss Security Issues," FBIS-SOV-1999-0817, pp. 1~2.

난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 냉전시대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이 지리적으로 단지 한 시간 반의 비행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이 안보면에서 특별한 관심사임을 강조하여 왔다.⁵⁷⁾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첫째, 구소련 정부는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 러시아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⁵⁸⁾ 둘째, 북한의 돌발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1961년의 북·소 동맹조약, 즉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1996년 9월 10일 폐기하였다. 러시아는 군사동맹이 배제된 신조약을 북한과 체결하고자 하였다. 셋째, 북한의 상황을 극심한 경제 및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1997년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 및 1998년 국방위원장 재취임 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남북한과의 균형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넷째,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6자회담이나 8자회담 등 다자간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속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였다. 데무린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996년 9월 북한 잠수정의 강릉 침투사건 당시 “남북한 모두 자제심을 보여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⁵⁹⁾고 말한 바 있다. 1999년 6월 발생한 연평해전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6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57) Gueorgui F.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p. 164.

58) 파노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 인터뷰 내용 참조. *Defenc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59) 『조선일보』, 1996. 9. 25.

것을 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양측에 자제하며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⁶⁰⁾을 촉구함으로써 남북한 어느 일방에 편 들기를 피하였다. 또한 북한이 서해에 있는 남한과의 분계선, 즉 남한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기로 9월 2일 공식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남북간의 국경협정 문제를 상호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남한과 북한에 각각 호소하였다.⁶¹⁾ 결국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남한이나 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긴장의 발원지로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불안정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한반도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남북한간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⁶²⁾이라고 남북대화에서 러시아 정부의 중개자 역할을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나) 북한의 핵개발 저지

러시아 정부는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IAEA의 사찰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⁶³⁾

60) “Russia Urges Restraint Between Korea.” Russia Today, www.russiatoday.com/news, 1999. 6. 22.

61) 『러시아방송』, 1999. 9. 3.

62) “Interviews with Ambassadors—Russia,” *The Korea Times*, January 7, 1999, p. 1.

를 유지함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10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다소 동결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⁶⁴⁾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때 러시아의 핵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된 핵개발 계획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도 불구하고 핵 연구와 개발을 완전히 은폐한 가운데 속도만 늦추면서 지속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⁶⁵⁾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중일지 모른다는 1998년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긍정적인 증거들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정보자료들에 의해 제공된 위성 사진들이 건설작업 이외에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금창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계획이 군사시설일지 모르나 핵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자원을 소비하는 것 이외에도

63) 1992년 6월 엘친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 긴급회담의 개최 제안, 동년 10월 엘친 대통령의 방일시 호소카와 일본 총리와외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64)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65)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마저도 잃을 것인데 왜 핵개발을 재개하겠는가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네바 핵합의를 동결시켜 의회가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 의회와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나, 북한은 생존문제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도 핵위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⁶⁶⁾

미국과 일본에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으로 1999년 초에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었을 때, 러시아는 이라크 사태와 같은 미국의 군사개입과 압박적인 수단에 의한 북한 핵 강제사찰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⁶⁷⁾ 다행히 이 문제는 미 국무부가 1999년 5월 실시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북한측이 핵계획 동결에 관한 미국과의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해결되었다.

(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

구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문서보관국」의 비밀문서(문서번호 28978)와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1960년대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방·군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브레즈네프를 통해 미사일 기술습득을 위한 인력파견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⁶⁸⁾ 이 결과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할

66) “The DPRK’s Alleged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Facility.”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3.txt.

67) 「동아일보」, 1999. 2. 1.

68) 「중앙일보」, 1999. 8. 30.

수 있었고 구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₁」(사정거리 300km)의 개량형인 「스커드 C₁」(사정거리 500km)를 제조하여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1단형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사정거리 1,000km)을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단식 미사일 「대포동 I₁」(사정거리 1,500km)과 「대포동 II₁」(사정거리 4,000km)의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중동 지역에 생산된 미사일을 직접 수출하며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및 부품과 기술의 제3국 지원은 미사일 탄두에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경우 대량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였다. 러시아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들 가운데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에서 혹은 가까운 지역에서 핵 및 다른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기술과 운송수단의 확산이라고 생각하였다.⁶⁹⁾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다단식 「대포동 I₁」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 발사체가 러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이웃 국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의 공동안보 및 안전 시스템 구축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⁷⁰⁾ 또한 「러시아 방송」은 1998년 9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경제, 인도차윈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킨다고 하는 이 때에 평양이 미사일을 실험한

69) V. S. 마스니코프, 「러시아와 중국: 아태지역에서 동반자관계의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p. 7.

70) 「러시아 방송」, 1998. 9. 1, 9. 4.

것으로 그 관계증진이란 기회마저 무효로 되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1999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러 안보관계 회의에서는 미·일의 TMD 체제를 자극하는 요인의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⁷¹⁾ 9월 12일 미국과의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포동 II」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였을 때 러시아는 이를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태지역 전반사태의 안정화를 내다보는 진일보”로 평가하고 “북한이 동의한 것은 이웃 나라들의 위구를 원만히 감안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 평양의 미사일 강령이 미·일의 TMD 구상을 부추겨주고 있을 것이라는 러·중의 위구도 풀어주고 있다”⁷²⁾는 반응을 보였다.

71) 「러시아 방송」, 1999. 8. 25.

72) 「러시아 방송」, 1999. 9. 14.

IV. 푸틴의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2000)과 정책

1. 신군사독트린 채택 배경

‘강한 러시아’의 건설을 대선 구호로 내세웠던 푸틴은 대통령 권한 대행직과 정식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000년 1월 10일 「러시아연방 신국가안보 개념」⁷³⁾, 1월 18일 국가두마의 개원연설 및 3월 24일 「신 대외정책 개념」⁷⁴⁾, 6월 28일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⁷⁵⁾ 등에서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96년 6월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1997년 12월 「러시아연방 안보청사진」 등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전방위외교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집권이후에도 러시아 정부의 외교노선은 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한국언론재단」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외교노선을 전방위정책(multi-directional policy)으로 특징지었다.⁷⁶⁾

2000년 6월 28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 의하면 세계질서와 관련,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첫째, 현대세계는 근본적이고 동태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73) 세종연구소, 「러시아연방 국가안보 신개념(전문)」, 통권 제2호(2000. 2).

74) “Security Council Views Foreign Policy Concept,” FBIS-SOV-2000-0324.

75)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mid.ru/mid/eng/econcept.htm.

76) Evgeniy V. Afanasiev, “New Leadership in Russia and Russian Internal and Foreign Policy, Asia-Pacific and Korean Peninsula Dimensions,”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0. 5. 24).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냉전종식과 러시아 개혁의 진전은 세계무대에서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 국가들과 러시아의 새로운, 평등한 그리고 상호이익이 되는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려는 계획들이 정당화되지 못했다. 셋째, 세계적인 핵분쟁의 위협은 최소한으로 축소되었고, 군사력이 국가간 관계에서 아직도 중요하나 더 큰 역할은 경제적, 정치적, 과학기술적, 생태적, 정보기술적 요인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넷째, 단일의 전세계적인 정보환경을 형성하는 과학기술 발전, 국제경제 관계의 심화와 다양화는 국가간 상호의존에 세계적 특성을 더하고 있다. 다섯째, 더 안정되고 위기 억제적인 세계구조의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러시아는 국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러시아 국익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① 미국의 경제와 힘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의 단극체제 경향, ② 국제안보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엔안보리 역할의 약화, ③ 현존하는 국제법적 메카니즘을 지나치는 힘의 사용, ④ 세계화라는 외부충격에 러시아연방 경제체제와 정보환경의 종속 위협, ⑤ 세계경제와 정치에서 국제기구와 G8, IMF, IBRD 등 역할의 확대, ⑥ 유럽, 아·태지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역적 및 하위지역적 통합의 발전, ⑦ 지역강대국간의 군사·정치적 경쟁, 분리주의 증대, 인종적·민족적 및 종교적 극단주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마약과 무기의 불법판매 등이다.⁷⁷⁾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여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대외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① 국가의 안보 확보, 주권과 영토

77)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pp. 3~4.

보전의 유지와 강화, 세계공동체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달성, ②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인정, 국가간 평등하고 동반자적 관계, ③ 러시아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적 여건들의 조성, ④ 러시아 국경을 따라 선린벨트의 형성, 러시아 인접지역에서 긴장과 분쟁의 제거, ⑤ 외국 및 국제기관들과 동반자 및 동맹 관계 구축, ⑥ 해외 러시아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옹호 등이다.⁷⁸⁾

러시아는 이와 같은 대외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과는 다수의 경우에서 근본적인 차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조성되어온 미·러 협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군축, 군비통제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역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관련된 것이고, 모든 차원에서 정기적인 양자간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상호간 이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대륙의 안보와 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NATO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와의 협력을 중요시하면서도 NATO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아시아는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점,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점,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적 호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APEC, ARF, 상하이 5개국회의 등 아·태지역의 주요한 통합구조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활성화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을 중국 및 인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두고 있다. 특히 세계정치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중·러의 근본적으로 동일한 접근방법을 지역 및 세계 안전의 근간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모든 영

78) *Ibid.*, pp. 1~2.

역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를 양국간 경제관계를 정치관계의 수준에 상응하게 하는 데 두고 있다. 러시아는 대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및 양국 이해에 상응하는 진실한 선린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현존하는 협상 메카니즘의 틀 내에서 양국이 상호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로 언급하면서 첫째, 한반도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를 확보하는 것, 둘째,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⁷⁹⁾

한편 러시아 정부는 1993년의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이 2000년 경까지를 상정한 과도기적 독트린이었기 때문에 1997년 초 이후로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고 수차례 수정을 하였다. 이 결과 러시아 국방부는 1999년 10월 9일 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赤星)를 통해 「러시아 군사독트린 초안」⁸⁰⁾을 공표하였다. 1999년 봄부터 여름 사이 코소보 사태와 관련하여 NATO가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이도 군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신개념을 채택한 바 있었다. 또한 이슬람인들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 자체 내에서 러시아군과 체첸 이슬람 반군 간의 전투가 지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은 중앙아시아내 구소련공화국 정부들과도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러시아 정부에게는 1993년의 군사독트린, 특히 핵독트린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신군사독트린을 마련하게 되었다.⁸¹⁾ 이 신군

79) *Ibid.*, pp. 11~12.

80)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209.207.236.112/nuke/guide/russia/doctrine/991009-draft-doctrine.htm;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중소연구』, 통권 84호 (1999/2000), pp. 224~237.

사독트린은 푸틴이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0년 4월 21일 러시아연방 안보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2. 신군사독트린의 내용과 특징

푸틴 대통령이 채택한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은 서론과 본문 3 부분(군사-정치적 원칙, 군사-전략적 원칙, 군사-경제적 원칙)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은 이 군사독트린이 첫째, 과도기, 즉 민주국가와 다구조적 경제의 형성, 러시아군의 재조직, 국제관계 체제의 역동적 변화 시기의 문서라는 점, 둘째, 1993년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기본규정」을 발전시키고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 개념」의 군사부문에 따라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본문의 ‘1. 군사-정치적 원칙’에는 ① 군사-정치적 상황, ② 주요한 군사안보 위협, ③ 군사안보, ④ 군사안보의 지휘, ⑤ 국가 군사조직, ⑥ 국가 군사조직 건설 및 준비가 포함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의 군사-정치적 상황의 전개 상태 및 전망은 두 가지 경향이 갈등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세계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고 하나의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데 바탕을 둔 세계의 단극화가 공고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과 민족의 평등, 국가 이익의 균등 보장, 국제법의 기본적인 규정 실현에 바탕을 둔 세계의 다극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진보·안정·국제안보는 다극화된 세계에서만 보장될 수

81) “Security Council approves new Russian military doctrine,” timesofindia.com/220400/22wor112.htm.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둘째, 다음 사항들을 군사-정치적 상황의 기본적인 특징들로 인식하고 있다. ① 세계전쟁, 특히 핵전쟁의 발발 위협 감소, ② 세계화 및 지역화되는 여건에서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메커니즘의 발전, ③ 지역 중심의 세력 형성 및 강화, ④ 민족 인종적 및 종교적 극단주의 증대, ⑤ 분리주의의 강화, ⑥ 국지전과 무장갈등 확대, ⑦ 지역적 군비경쟁 심화, ⑧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그 공급 자금의 확산, ⑨ 정보전의 심화, ⑩ 조직적인 범죄·테러·무기·마약의 불법유통 규모 확대 및 초국가적 특성 심화등이다.

셋째, 다음 사항들을 군사-정치적 상황의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① 극단적 민족-인종적·종교적, 분리주의와 테러 행위·조직·기구 지원, ② 파괴적인 군사-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 및 여타(특히 비전통적인) 수단과 기술 이용, ③ 현 국제 안전보장 메커니즘, 특히 유엔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효율성 감소, ④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 공통의 원칙과 국제법 규정을 불이행하는 군사-무력 책동, ⑤ 군비제한 및 군축 관련 국제조약·협정 위반 등이다.

넷째, 주요한 군사안보 위협을 대외적 위협과 대내적 위협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대외적 위협에는 ① 러시아에 대한 영토 요구, ② 러시아의 내부문제 간섭, ③ 국제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참여 방해, ④ 러시아와 동맹국들의 국경 부근 무장투쟁 발발, ⑤ 러시아 및 동맹국들의 국경 부근과 인접 해안에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병력 증강, ⑥ 러시아 및 동맹국들의 군사안보에 손상을 주는 군사블러프와 동맹 확대, ⑦ 외국군이 (유엔안보리의 승인없이)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우호국의 영토에 투입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내적 위협에는 ① 헌법기구의 강제적 전복 시도, ② 극단적 민족·

인종, 지역적 분리주의자, 테러조직 및 기관들이 러시아 내부의 불안정을 야기하려는 범법행위, ③ 불법 무장단체의 창설, ④ 조직 범죄, 테러, 러시아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기타의 대규모 밀수와 범법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군사안보의 중요한 목적을 “러시아의 존재와 발전에 긍정적인 외적 조건을 조성하고,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의 안보와 국익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인 군사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가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군사공격을 예방하는 것”에 두고 있다. 군사안보와 관련,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 금지, 억지를 위한 핵 보유국의 위상 보존, CIS의 집단안보체제 강화, 미국과 양자간 협상 및 다자간 협상에 의한 핵무기의 장기적 축소, 1972년 ABM 조약의 유지 및 강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 등을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러시아는 핵무기를 공격 억지, 러시아 및 그 동맹국의 군사안보, 국제안정 및 평화 유지의 실제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NPT 가입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가 핵무기 보유국과 동맹의 의무가 있으면서 혹은 핵 보유국과 공동으로 러시아나 그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하여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대규모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권을 유보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본론의 ‘2. 군사-전략적 원칙’에는 ① 전쟁 및 무력충돌의 특성, ② 군대 및 기타 병력의 사용 기반, ③ 군대 및 기타 병력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3. 군사-경제적 원칙’에는 ① 군사-경제적 군사안보, ② 국제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국제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 러시아는 CIS 집단안보조약 참여국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발전에 우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의 주요 방향을 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정치적 입지 강화, ② 국가의 수요에 의한 외화 유입, 군수산업 발달, 무기 및 군사장비의 민수화·정리·재활용, 방위산업기업의 건설적인 구조조정 등의 증대, ③ 재래식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의 국가 수출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은 러시아 군사안보 활동이 방어적 성향임을 밝히고, 러시아가 전쟁 및 무력충돌의 예방과 제거, 군축 및 군사블럭의 폐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체제 형성, 균형되고 평등한 다극세계 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푸틴 대통령의 신군사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1993년 채택된 엘친 대통령의 군사독트린이 2000년경까지의 과도기 독트린이었다면 신군사독트린도 러시아군 개혁과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과도기 군사독트린이라는 점이다.

둘째, 신군사독트린은 엘친 대통령의 군사독트린이 채택된 이후 많이 변화된 러시아의 지정학적, 군사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자국에 불리한 세 분야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①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다. CIS 내에 통합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고 약간의 국가들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NATO 팽창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② 체첸과 코소보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실질적 군사위협이 노정되었고 러시아 국경 및 국경부근 분쟁지역에서 긴장이 지난 3년간 증

대되었다. ③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권력있는 부서들의 구조 변화와 그들의 질적 한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경수비대와 긴급상황부(the Ministry for Emergency Situations)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대의 전투 태세와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재정 때문에 점차 약화되었다.⁸²⁾

셋째, 현대의 군사·정치적 상황의 전개 상태 및 전망과 관련, 신군사독트린은 두 개의 상반되는 경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초강대국 미국의 지배를 의미하는 단극체제와 러시아를 포함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다수의 중심들을 암시하는 다극체제이다. 신군사독트린은 “러시아연방은 사회발전, 안정 및 국제안보가 단지 다극세계의 틀 속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러시아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증대를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기존의 규정들을 수정하고 있다. 엘친 대통령의 군사독트린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과 관련이 있었다. 신군사독트린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대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 신군사독트린은 “러시아연방은 자신이나 그 동맹국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사용에 대한 반응으로, 또한 러시아연방과 그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대규모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핵무기 사용권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화학무기와 같은 다른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반응으로 핵무기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가 핵보유국에 대해서만 아니라 상황이 러시아 안보에 중대하다면 어떠한 국가나 그 동맹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신군사독트린은 무엇이 중대한 상황인지를

82) “New Russian Military Doctrine,” www.alenafix.com/old-fbg/articles/russdoctrine.html.

상술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의 국가 보전과 주권이 문제시되는 상황을 의미함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재래식 군사력만이 핵비보유국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더 이상 생각되지 않는다.⁸³⁾

다섯째, 1993년 군사독트린에서와 같이, 신군사독트린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군사독트린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정확한 조건들을 명백히 상술하지 않은 반면, 신군사독트린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용의 목적들을 더 잘 정의하고 있다. 신군사독트린은 세계전쟁, 지역전쟁, 국지전쟁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전쟁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핵무기 사용은 첫 두가지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의 재래식 군이 지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경우, 공격자에게 제한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⁸⁴⁾

여섯째, 신군사독트린은 국방부 군이 외부침략을 격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와 불법적 무장폭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신군사독트린에 의하면 군사력은 다섯 가지 형태의 작전에 이용될 수 있다. ① 전략적 분쟁(대규모 및 지역 전쟁), ② 무력분쟁(국지전쟁 및 국제 무력분쟁), ③ (대내 무력분쟁에서 다른 군과) 공동 작전, ④ 반테러 작전, ⑤ 평화유지 등이다.

83) Nikolai Sokov, "Overview: An Assessment of the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www.nyu.edu/globalbeat/nuclear/CNS1099.html. pp. 1~2.

84) Nikolai Sokov, "Overview: An Assessment of the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pp. 3~4.

3. 군사정책

가. 대내 군사정책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0년 초 자신의 대선운동 동안 대내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 개혁을 시도하려는 그의 능력은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소모시키면서 계속되는 체첸 전쟁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경제의 구조조정 같은 주요한 대내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도전을 받았다. 특히 군 개혁은 경제적 재원과 급속한 현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에 계속 직면해 있다. 더구나 군 개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세르게예프 국방장관과 크바쉬닌 총참모장 간의 노골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KGB에서 자신의 오랜 동료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책임을 맡고 있는 안보위원회에 군 개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주었다. 이에 따라서 군 개혁에 대한 책임이 총참모부로부터 대통령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정치부서로 이양되었다.⁸⁵⁾

2000년 8월 11일 안보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떠한 군 개혁정책도 명백하고 균형된 경제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개혁의 결과는 재원의 더 효율적인 사용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군 구조는 러시아가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직면하는 위협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 특별회의에서는 1990년대에 잘못된 개혁으로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체첸 전쟁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난 재래식 전력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육·해·공군 3군종으로 전환

85)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p. 109.

의 착수, 모든 군종에 대한 동등한 재정원칙의 폐지와 더 합리적인 체제의 도입 등이 결정되었다.⁸⁶⁾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전술한 신군사독트린뿐만 아니라, 1월 10일 「러시아연방 신국가안보개념」, 1월 18일 국가두마의 개원 연설, 3월 24일 「신대외정책 개념」, 6월 28일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 등에서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 러시아군에서 중요한 변화는 국방부 지휘부에서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은 3월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최초의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민간 통제를 확립한다는 자신 개혁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내 신임 재정담당 차관은 부패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방비의 비밀유지 필요성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외정보국(SVR)에 근무하던 드미트리예프가 군비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또한 「외국과의 군사기술협력위원회」 의장이다. 그의 임명은 재장비가 푸틴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한 우선순위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무기판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전에 군산복합체의 주요 인물이었던 모스크 브스키 장군이 차관에 임명되었다. 공군의 급박한 재장비 필요성 때문에 다수의 공군 지휘부도 교체되었는데 약 2,000대의 공군기 중 단지 46%만이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군사협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전의 국제군사협력 본부장이고 NATO에 대한 강경파인 이바소프 장군이 이전에 국방부 대외관계부장이었고 외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마추케예비치 장군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이전의 작전본부장이었던 발루에프스키 장군이 총참모부 차장이 되었고 MD에 관한 러·미 양자협상에 대한 책임을 맡

86) *Ibid.*, pp. 109~110.

고 있다.⁸⁷⁾

푸틴 대통령의 다음 주요 과제는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상군의 지위를 향상시켜 별도의 군종으로서 해군이나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1993년 옐친 대통령의 개혁 당시 지상군은 별도의 군종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푸틴 대통령은 코르밀체프 장군을 지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에게는 전투훈련 담당 차관직도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2개 직에 대한 그의 임명은 지상군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첸 사태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전투훈련을 더 중시하게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 하에서 전략로켓군은 군의 한 부서로 지위가 하락함으로써 별도의 군종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전략군에 대한 주요한 변화는 2001년 6월 1일 새로운 독립적인 「우주 및 우주방어군」(Space and Space-Defence Force)이 창설된 것이다. 이것의 임무는 이전 전략로켓군이 맡았던 우주선 발사와 통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튼튼하고, 현대화된, 봉급수준이 높은 직업군’ 창설을 촉구해왔고 봉급을 20% 인상하였다. 이에 대한 재정마련을 위한 한 가지 조치가 병력을 다시 36만 5,000명 감축하는 것이고, 이는 200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육군 18만명, 해군 5만명, 공군 4만명만큼씩 각각 감축될 것이다. 현 군복무 기간과 조건을 완전히 개혁해야 징병제를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업군 창설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⁸⁸⁾

체첸사태와 관련, 1999년 8월에 시작된 제2차 체첸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 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2001년

87) *Ibid.*, p. 105.

88) *Ibid.*, pp. 106~107.

1월 약 5,000명의 러시아군 철수는 전쟁 수행에서 변화를 나타냈다. 약간의 중장비들이 점차 철수되고 있고 비행기 및 대포 공격이 양과 규모에서 줄어들었다. 「연방보안국」(FSB)이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체첸 반군들의 저항은 지속되고 있다. 체첸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인권유린은 러시아 및 외국 언론, 「유럽이사회」, OSCE 및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체첸 군사작전과 경제 재건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큰데, 러시아 분석가들은 2000년에 소요된 비용을 총 330억 루블(9억 4,000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⁸⁹⁾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 군사개혁의 주요한 발전은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조정하고 재정향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특히 CIS 집단안보조약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2001년 5월 예레반에서 개최된 CIS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적 돌발사태, 특히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지원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신속배치군’을 창설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상비군이 아니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대대 병력 및 러시아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러시아 장군이고 사령부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가 될 것이다.

199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회복추세에 있다. 낮은 이자율 및 수출 확대와 더불어 원유와 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200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로 국방비도 증가하였다. 2000년 1,410억 루블이었던 국방비가 2001년 2,190억 루블로 55% 증가하였다(<표-3> 참조).

89) *Ibid.*, p. 108.

<표-3> 러시아 국방예산과 지출(1992~2001년)

(단위: 백만 루블)

	국방예산	연방예산중 %	국방비 지출	연방지출중%	국내총생산 (GDP) 중 %
1992년	384	16.0	855	16.4	4.7
1993년	3,116	16.6	7,210	20.7	4.4
1993년 수정	8,327	-	7,210	20.7	4.4
1994년	40,626	20.9	28,028	16.4	4.6
1995년	48,577	19.6	47,800	12.2	3.1
1995년 수정	59,379	21.3	47,800	12.2	3.1
1996년	80,185	18.4	63,900	14.2	3.0
1997년	104,300	19.7	79,700	16.2	3.1
1997년 수정	83,000	19.7	79,700	16.2	3.1
1998년	81,765	16.4	56,700	12.7	2.1
1999년	93,702	16.3	116,000	17.2	2.6
1999년 수정	109,000	19.0	116,000	17.2	2.6
2000년	140,850	16.7	-	-	2.6
2000년 수정	151,000	17.6	-	-	2.6
2001년	218,940	18.4	-	-	2.9

주: 1998년에 군연금 110억 루블이 국방예산으로부터 사회예산으로 이전되었다.

출처: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 110.

또한 2000년 말에 러시아 군산복합체에는 기구개편이 있었다. 이전에 「로스보오루체니예」(Rosvooruzheniye)와 「프롬엑스포트」(Promexport)로 나뉘어 있던 수출기구가 해체되고 새로운 회사 「로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가 창설되었다. 이전 수출기구들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었으나 새로운 회사는 국방부

산하에 있다. 더구나 2001년 7월 19일 항공전자공학 산업이 새로운 국영회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는 방위산업이 엄격한 국가통제하에 놓여야 된다는 크레믈린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⁹⁰⁾

나. 대외 군사정책

(1) 세계적 차원

1999년 12월 31일 엘친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임으로 푸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게 되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요청하였다. 푸틴도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해 실용주의적 전방위의교를 수행하면서 미국과 우호관계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ABM 조약 개정과 NMD 체제 구축 문제, 체첸 사태 등으로 미·러간 갈등이 노정되었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000년 1월 31일~2월 2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행 및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NMD 체제 구축의 불가피성, ABM 조약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체첸 사태의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3월 26일 대선 승리이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의 NMD 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미국에게 NMD 계획 추진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1993년 체결되었으나 그 동안 비준을 지체시켜온 START II를 2000년 4월 15일 비준하였다. 그러나 국가두마는 미국이 ABM 조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NATO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핵

90) *Ibid.*, p. 109.

무기를 배치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와 START II 탈퇴 문제를 협의한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다.⁹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에 대해 1997년 9월 합의한 START III보다 더 큰 폭의 전략핵무기 감축안을 제시하였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4월 24~27일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 및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NMD 구상은 ABM 조약 및 NPT 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공동 미사일방어망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와 사전 협의를 거쳐 ABM 조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NMD 구축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6월 3~5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NMD 체제 구축, 북한의 미사일 위협, 체첸 사태, 발칸 반도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ABM 조약 개정 필요성 및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입장을 밝혔으나, 푸틴 대통령은 ABM 조약 개정불가와 미국의 NMD 구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향후 20년간 각각 34만 톤의 무기용 플루토늄 폐기, 전세계의 미사일 및 위성발사에 대한 자료교환센터 설립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⁹²⁾ 6월 13일 미·러 국방장관 회담에서 코언 미 국방장관은 NMD 관련 기술 공유를 제안하면서도 러시아측이 제시한 유럽 공동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북한 등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을 방문하여 일련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NMD 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

91) “Duma START II Ratification Tied to NMD,” FBIS-SOV -2000-0417, pp. 1~3.

92) “Russia: Putin, Clinton Sign Strategic Stability Statement,” FBIS-SOV -2000-0604, pp. 1~2.

다. 이러한 외교 공세에 중국과 북한은 물론 유럽국가들이 동조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9월 1일 NMD 배치 최종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질서의 다극화 및 군사무기 판매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10월 2~5일 인도를 방문하여 「경제·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 정상은 ABM 조약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 기술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12월 13~17일 쿠바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ABM 조약 개정 및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2001년 러시아의 대미관계에서는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이전까지 협조면보다는 갈등면이 부각되었다.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러간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으나, 미국의 MD계획 강행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월 20일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시 미국의 공격 핵무기를 감축하는 동시에 미국 전역을 외부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MD 체제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ABM 조약 준수를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ABM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군비통제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MD계획 추진시 러시아는 군비경쟁 심화와 전략적 균형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1월 23일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당선 축하친서에서는 미·러 상호협력의 강화, 21세기 국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공동 모색, 동등하고 호혜적인 양국관계, 미국과의 대화 지속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NMD 체제 구축 등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와 미국의 NMD체제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창립한 「세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GCS) 2차 전문가회의를 2월 15~16일 외무부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남북한 등 71개국과 유엔 등의 대표 약 120명이 참석하였고, 2000년 3월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북한은 참가하였으나 미국은 불참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안보·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 등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 「상하이 협력기구」(SCO) 및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테러 사태시 푸틴 대통령은 애도를 표시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부시 대통령과 9월 12일 대테러 활동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10월 4일 테러사건 이후 미·러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을 지지한다고 10월 7일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에 오사마 빈 라덴 및 테러 조직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테러 사건 발생이후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MD 계획 추진에서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로 변화됨에 따라서 11월 13~15일 워싱턴과 텍사스주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군축, 대테러 공조, 경제협력 등 현안이 논의되었고, 핵무기 대폭 감축이 합의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11월 13일 푸틴 대통령과의 워싱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향후 10년 안에 현재의 약 7,000기 핵탄두를 2/3 수준으로까지 감축해 1,700~2,200기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다음 날 약 6,000기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1/3 수준으로 감축, 2,000기 이하로 줄일 것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MD 체제 구축을 위한 실험이 ABM 조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

대입장을 재확인하였다.⁹³⁾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12월 13일 테러범과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ABM 조약으로부터 탈퇴한다고 러시아에 공식통보하였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TV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ABM 탈퇴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전혀 예측불가능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ABM 체제를 대체할 새 안보체제를 만들자고 촉구했다.⁹⁴⁾ 중국이 같은 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한 어조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달리 러시아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했다. 이는 첫째, 미국이 공식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는 점, 둘째, 러시아도 조약 폐기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 셋째, 러시아가 조약 폐기 시까지 조약의 수정을 시도하면서 더 큰 현안인 전략핵 감축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⁹⁵⁾ ABM 조약은 일방이 6개월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면 탈퇴가 가능하므로 2002년 6월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국제군축 노력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야기하여 국제전략 균형이 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 무기판매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에 30~4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는데, 이는 1999년보다 약 10억 달러 증

93) *BBC NEWS*, news.bbc.co.uk, 2001. 11. 14.

94) “Putin Calls ABM Move ‘Mistaken.’” *Washingtonpost*, December 14, 2001; “푸틴, ‘미국의 ABM 탈퇴는 실수’(종합),” www3.yonhapnews.co.kr, 2001. 12. 14.

95) “<초점> 미 ABM 탈퇴, 러시아의 대응,” www3.yonhapnews.co.kr, 2001. 12. 14.

가한 것이다(<표 4-참조>).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01년 12월 26일 안보회의에서 2001년 무기수출이 20% 정도 증가하여 총 44억 달러 규모에 달해 소련 붕괴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수출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기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⁹⁶⁾

<표-4> 러시아의 군사무기 수출(1993~2000년)

	무기수출 10억 10억 달러, 루블		국내조달 10억루블	무기수출/ 국내조달 %	상품수출 총액 10억달러	무기수출/ 수출총액 %	러시아 몫/ 전세계무기 시장 %
1993년	3.4	3.4	2	170.0	44	7.7	10.6
1994년	1.7	3.7	8	46.3	67	2.5	5.8
1995년	3.5	16.0	10	160.0	83	4.2	9.7
1996년	3.1	15.9	13	122.3	91	3.4	8.7
1997년	2.6	23.1	21	110.0	89	2.9	6.3
1998년	2.2	21.4	17	125.9	74	3.0	6.1
1999년	3.1	76.6	24	319.2	73	4.3	8.5
2000년	3.4	100.1	27.3	367	90	3.8	11.9

출처: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 111.

96) “러 무기수출 올해 20% 증가,” www.yonhapnews.net/news, 2001. 12. 27.

러시아 무기의 판매 대상국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중국과 인도가 주요한 구매국가이다. 2000년 11월 현재 중국이 50%, 인도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은 주로 해군장비를 구매했는데, 중국은 「소브레멘니」(Sovremenny)급 구축함과 「킬로」(Kilo)급 잠수함 그리고 인도는 같은 급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였다. 이 외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8%, 알제리가 2.7%, 벨로루시가 2.4%, 베트남이 1.7%, 시리아가 1.7%, 기타가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에 관한 1995년의 고어-체르노미르딘 합의를 위반하여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 간에는 2001년 3월 테헤란에서 1989년 중단된 재래식 무기 거래를 재개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란은 지상공격 전투기, 헬기, S-300 방공미사일 등의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데, 총 40~5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러시아는 리비아 및 알제리와 군 현대화, 재장비를 위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⁹⁷⁾

(2) 동북아 차원

(가) 대중 정책

러시아는 중국과 정례 정상회담 개최, 고위인사 상호방문, 군사 교류·협력을 통해 미국의 NMD, TMD 구축 계획과 국제 안보질서 주도에 반대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지향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00년 7월 5일 타지크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제5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97)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 111.

“세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다극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력사용에 반대하며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⁹⁸⁾면서 NATO의 신 전략 개념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7월 17~19일 방중시 「베이징 공동선언」⁹⁹⁾을 채택하고 중·러 양국이 선린우호 협조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로 하는 한편,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질서 다극화를 위해 협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대만 문제에 대한 ‘4불 입장’(대만 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반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반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반대)을 재천명하였고, 중국은 체첸 문제가 러시아 내정 문제이며 러시아의 민족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NATO의 코소보 개입사태 때와 같이 미국 등 서방이 인권을 내세워 러시아나 중국에 간섭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중·러 양국은 제55차 유엔총회에서 「ABM 조약 준수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NMD와 TMD 구축 계획을 견제하고, 대만을 TMD 체제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가 적극 지지함으로써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2000년 중·러 간에 활발한 군사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방위산업 담당 부총리와 양국 국방장관 등 군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다. 지호전(遲浩田) 중국 국방장관의 1월 16~18일 방러시 양국은 「군사협력 확대에 관한 비망록」을 교환하

98) “‘Shanghai Five’ Countries’ ‘Dushanbe Declaration’ Aims at International Stability,” FBIS-CHI-2000-0706, pp. 1~2.

99) “Full Text of Sino-Russian 18 July Declaration,” FBIS-CHI-2000-0718, pp. 1~4.

고 군사정보 교류기구 설치, 전투기·함정·미사일 등 러시아 첨단 무기 제공, 합동군사훈련 강화, 향후 15년간 군사무기·장비의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 신형 구축함 2척, 키에프급 구형 항공모함, SS-N-22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24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SU-30 전폭기 판매 및 라이선스 생산기술 인도, R-77 공대공 미사일 100기 판매 및 관련기술 인도에 관해 중국과 합의하였다.¹⁰⁰⁾

2001년 러시아는 중국과 3차의 정상회담과 다수의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세계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서 굳건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향후 20년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7월 16일 체결되었다. 중·러 양국은 미국의 MD 체제 구축과 ABM 조약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전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양국은 긴밀한 군사협력을 지속하였다.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장만년 중국 중앙국방위원회 부주석을 2월 21일 만난 뒤 중·러는 NATO의 동진 및 NMD 체제 구축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한 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에게 유럽미사일방어체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2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제안이 전 세계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¹⁰¹⁾ 중·러·북한 3국은 4월 10일 유엔군축위원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NMD

100) “Chi Haotian, Sergeyev Hold Talks, Sign Memorandum,” FBIS-CHI-2000-0118, pp. 1~2;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39~40.

101) “중, 러시아의 유럽미사일방어 논의 가능,” www3.yonhapnews.co.kr, 2001. 2. 22.

체제가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하는 한편, 1972년 체결된 ABM 조약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하이 5개국 외무장관 회담 참석차 모스크바를 4월 27~31일 방문한 당가선 중국 외교부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대대만 무기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협력 강화와 군사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14~15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은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상하이 5개국 체제를 「상하이 협력기구」(SCO)로 개편하는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상하이 협정」이 서명되었고,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6개 국 국방장관들은 미국의 MD에 반대하고 ABM 조약을 지지하는 별도의 성명서에 서명하였다.¹⁰²⁾ 6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강택민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16일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러 정상회담이 7월 15~1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중·러 선언우호협력조약」¹⁰³⁾과 「모스크바 공동선언」¹⁰⁴⁾이 채택되었다. 1950년 2월 14일 체결된 「중·소 우호동맹 및 원조조약」이 양국간 분쟁으로 1980년 자동 폐기된 이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 없던 상태에서 ‘동등하고 신뢰있는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총 2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전략협력 동반자관계의 장기적·전면적 발전(제1조),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전략핵탄두 상호 불겨냥(제2조), 러시아의 영토보존 정

102) “Xinhua Carries Press Communique of Shanghai Summit,” FBIS-CHI-2001-0615, pp. 1~4.

103)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104) “Text’ of Joint Statement Issued by Jiang Zemin, Putin in Moscow,” FBIS-CHI-2001-0716, pp. 1~5.

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의 독립 반대에 대한 러시아의 재확인(제4~5조),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강화와 상호 군사력 감축(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도 이것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임을 명시하고 신조약에도 언급했던 아무르강 유역의 영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선언하였다.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직후 「상하이 협력기구」 6개 회원국은 9월 1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타에서 총리급 회담을 갖고 국제테러리즘 퇴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강택민 국가주석은 9월 18일 전화통화에서 대테러 국제기구 창설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미·중·러 3국은 9월 24일 테러와의 장기전쟁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발언을 지지하였다. 그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극단주의자들에게 정부전복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차원의 대응조치를 희망하여 왔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 협력기구」는 10월 11일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회동하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이후의 지역안보 문제와 지역테러 방지센터 발족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푸틴 대통령과 강택민 국가주석은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 회담에서 10월 20일 만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체첸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 「상하이 협력기구」의 역할과 기능 확대·발전, 중·러관계 발전 상황에 대한 만족 등에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테러리즘 국제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군사작전에서 정치적 해결단계로 이행되는 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¹⁰⁵⁾

또한 차기 중국 지도자로 지목되는 호금도(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10월 27~28일 방러, 러시아 지도자들과 ABM 조약이 세계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아시아 안보상황,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강택민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11월 12~14일 텍사스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고, 양국 정상은 미국의 MD 계획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의 대중 군사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 중국은 1997년 10억달러 상당의 소브르메니급 구축함 2척을 러시아에 주문한 바 있는데 첫 번째 구축함은 2000년 12월 중국 동해함대에 편입되었다. 러시아는 나머지 한 척을 2001년 1월 중국에 인도하였다.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는 방러 중인 장만년 부주석을 만나 2월 21일 동부 국경지대에 요격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군사장비 공급에 대한 중국의 결제방법 등 양국간 군사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⁶⁾ 중국은 중·미 군용기 충돌사건 이후 정찰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3개 전구(戰區)와 전략지역에 TU-154M 정찰기를 배치할 방침을 세웠다. 3월 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민간 군사분석 기업인 「스트래트포 닷컴」(stratfor.com)은 중·러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NMD 체제 구축을 우려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을 동결하고 있어 대포동 2호 발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105) “중-러, ‘위구르-체첸 분리세력 공동 타격’ 합의,” www3.yonhapnews.co.kr 2001. 10. 21.

106) “러-중, 나토 동진 및 NMD에 입장 유사,” www3.yonhap-news.co.kr, 2001. 2. 21.

7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2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SU-30MKK 3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신형 민항기 투폴레프 Tu-204, Tu-214, 일류신(II)-96-300 등의 구매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 전투기 SU-27기 200대를 라이선스로 대량 생산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등 서방측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⁷⁾

(나) 대일 정책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과 모리 일본 총리의 취임이후 공식 및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일·러 양국은 정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모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대일 안보·군사 협력의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러시아 정부가 2000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약속한 평화조약 대신 일종의 ‘중간조약’ 체결을 일본정부에 제의하였다고 1월 20일 보도함으로써 양국간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었다. 이는 “2000년 말까지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1997년 11월 옐친 전 대통령과 하시모토 전 총리 간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간조약은 영토문제와 평화조약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1998년 11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107) “러, 최신예 전투기 중국 인도 준비,” www3.yonhapnews.co.kr, 2001. 9. 20.

국경선 획정과 평화조약의 분리를 제안한 바 있는 러시아는 이후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미루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중간조약’ 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단호하게 부인하였다.¹⁰⁸⁾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00년 2월 10~11일 방일하여 고노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동반자관계 노선이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고 양국간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는 오부치 일본 총리에 대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평화조약 체결, 경험 확대, 극동지역의 안보 문제 등을 토의하였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무장편제에서 제외되는 원자력 잠수함들의 재활용 비용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26일 푸틴의 대선 승리 직후 일본 정부는 양국간 오랜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를 신임 러시아 대통령과 타결짓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러 유화정책을 수행하였다. 오부치 일본 총리의 갑작스런 혼수상태로 그를 승계한 모리 신임 총리는 4월 5일 첫 기자회견에서 도쿄의 대러시아 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최초의 외국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양국 정상회담 직전 일본 국회의원협회 대표단이 4월 16~20일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들과 접촉하여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 당선자와 모리 총리간 비공식 정상회담이 4월 29일 개최되었다. 모리 총리는 취임이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와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대러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인 평화조약 체결을 희망하였

108) 「한국일보」, 2000. 1. 21; “Moscow Denies Submitting Draft Treaty to Tokyo,” FBIS-EAS-2000-0120.

다. 푸틴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최대 현안인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단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¹⁰⁹⁾ 푸틴 대통령은 7월 4일 일본 「후지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아·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러시아의 기본 파트너의 하나라고 말하고 일본의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한 것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긴밀히 연관된다고 말했다.

7월 21~23일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9월 3~5일 일본을 공식방문하여 아키히토 천황을 예방하였다. 그는 모리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과 경제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 군고위급 접촉 등을 추진하고 미·일의 TMD 체제와 미국의 NMD 체제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며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노후 핵잠수함 해체와 폐 플루토늄의 안전한 제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모리 총리는 하시모토 전 총리와 엘친 전 대통령 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를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북방 4도 북쪽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되 당분간 러시아의 시정권을 인정한다는 기존 제안을 되풀이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모리 총리의 발언이 “러시아측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해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만약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하보마이 섬과 시코탄 섬을 일본측에 돌려준다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¹¹⁰⁾ 모리 총리

109) “Putin, Mori End Talks, Call For Closer Economic Ties,” FBIS-SOV-2000-0429.

110) 「동아일보」, 2000. 9. 5; “Russia, Japan Oceans Apart on Islands,” *The*

는 답방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방영토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에 푸틴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방류를 취소하였다.

2001년에는 러·일 관계가 매우 호전되어 러시아측은 대일관계가 수 년내 최고로 훌륭한 상태라고 평가하였고 일본도 양국관계 수위가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만족을 표명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정치 안정과 경제회복 추세로 일본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250명의 대규모 경제인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은 1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양국관계 발전, 국제현안, 평화조약 체결 등 3개 분야를 논의하고 양국간 국경확정에 관한 자료집 공동발간과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로 하는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1997년 러시아 사할린주 유주노사할린스크에 하바로프스크 일본 총영사관 출장소를 설치한 바 있는데 2001년 1월 29일 이를 총영사관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을 관할하는 사할린주에 대한 전략거점이자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중인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의 협력을 3월 16일 요청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프랑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모리 총리는 북방 4개 섬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연기해 오다 3월 25일 이르쿠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개 항으로 된 「이르쿠츠크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① 평화조약 체결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1956년 공동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기초적 법적

문서라는 점을 확인하고, ② 평화협정을 위해 북방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③ 1993년 「도쿄 선언」의 토대에서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기로 합의하였다.¹¹¹⁾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호전되자 후지타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이 2월 러시아를 방문한 데에 대한 답방으로 구소련 시대를 포함해 사상 최초로 쿠로에도프 러시아 해군참모총장이 4월 18~22일 방일하여 방위청 장관, 해상자위대 참모장 등과 만나고 요코스카 해군기지도 방문하였다.

모리 전 일본 총리가 5월 13일 아사히 TV에 출연해 3월 이르쿠츠크 양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방영토 4개 섬 영유권 문제를 2개씩 분리해 일본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다시 야기되었다. 더구나 「일·러 우호의원연맹」 대표단이 “‘2개 섬 선 반환’이라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4개 섬 일본 귀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고이즈미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5월 14일 일본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¹¹²⁾ 이와 같은 갈등 노정에도 불구하고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일·러 우호의원연맹」 대표들과 회담시 일본 대표는 “일·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갖춰졌다”는 데 동의하고 두 나라 관계 수위가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¹¹³⁾

나카타니 일본 방위청 장관은 6월 18일 파노프 주일 러시아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교류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111) “Tokyo Editorial Raps Irkutsk Accord for Failing to Ensure Return of 4 Islands,” FBIS-EAS-2001-0326, pp. 1~6.

112) “러, 쿠릴열도 분리 협의 강력 부인,” www3.yonhapnews.co.kr, 2001. 5. 14.

113) “러 외무,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논의 지속,’” www3.yonhapnews.co.kr, 2001. 5. 15.

를 보았다. 파노프 대사는 나카타니 장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면서 양국간 육·해·공군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나카타니 장관은 양국 군인들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7월 30일 “러시아는 최근 구축된 일본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양국간 건설적인 파트너 관계의 구축을 희망하였다.¹¹⁴⁾ 일·러 양국은 1996년 4월 이후 거의 매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01년내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정해온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가 이바노프 장관의 일정이 바빠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8월 21일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쿠릴열도 주변의 쫄치 조업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이 컸다.

양국간 최대 현안인 북방 4개 섬 문제와 관련, 10월 21일 상하이 APEC 정상회담 폐회직후 개최된 일·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해서는 반환협상을, 구나시리와 에토로후에 대해서는 귀속협상을 병행해 나간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일·러간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3) 한반도 차원

(가) 대한민국 정책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 10주년을 맞는 2000년 정상회담, 총리회담, 외무·국방장관 회담 등을 개최하고 기존의 상호관계를 전반적으로 점

114) “Official: Russia set to further dialogue with Japan,” FBIS-SOV-2001-0731.

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하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건설적 협력을 다짐하고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기대하였다. 안보면에서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방산·군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엘친 대통령의 조기사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0년 1월 1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가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안보·군사면에서 주변 4국과 정기적인 군사문제 협의채널을 수립중이었던 한국 정부는 2월 17~18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러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에서는 미사일 비확산 등 대량과괴무기의 군축·비확산, 대인지뢰 및 소형무기 문제, 대량과괴무기의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참여유도 방안이 논의되었다.¹¹⁵⁾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일층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 방침에 따라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월 20일 러시아 외무부 로슈코프 아·태 담당차관 내정자 및 이임하는 카라신 차관을 만나 수교 1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측의 협력 방향을 협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3월 26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그의 강력한 영도력 하에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그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115) "ROK, Russia Hold Disarmament Talks in Moscow," FBIS-EAS-2000-0218, p. 1; 『조선일보』, 2000. 2. 17.

4월 25~26일 한·러 국방부 간의 제3차 국방정책 실무회의 및 5월 16일 조성태 국방장관과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각각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상호 공동 관심사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양국 군사 교류·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 양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서간 긴밀한 대화 유지, ② 2000년 5월 구축된 한국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함대간 긴급연락체제의 적극 활용, ③ 양국 군 지도급 인사교류의 지속, ④ 양국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⑤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방한 등이다.¹¹⁶⁾

또한 1998년 5월 29일 체결된 한·러 양국 차관간 「상호교환방문 합의각서」에 따라서 한국군 사절단이 2000년 5월 17~27일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부부 16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군의 친선사절단이 6월 20~29일 방한하였다. 러시아 사절단은 국방부 차관과 육사, 해사 및 해군작전사령부를 예방하고 서울, 부산, 제주도 등 주요 고적지 및 산업·관광지를 방문하였다.

6월 13~15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주변국의 개입없이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직접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크게 만족하였다. 이는 주변 4국 중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일의 영향력 약화가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직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러 간의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새로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6월 28~29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① 양국관계 평가 및 향후 한·러관계 발전방향 협의, ②

116) 「문화일보」, 2000. 5. 17.

남북정상회담 결과 지지 및 계속적 협력 약속, ③ 한·러간 고위급 정치대화 증진, ④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한 확정, ⑤ 김대통령 방러 후속조치 독려, ⑥ 수교 1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¹¹⁷⁾

유엔 새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월 8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및 경험 활성화 등 한·러관계 강화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7월 19~20일 북한 방문 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설명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9월 30일 지난 10년간 한·러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수교 10주년 기념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2000년 한·러간 군사관계에서의 가장 큰 의의는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군사기술·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1997년 11월 체결된 양국 정부간 「군사기술·방산·군수 협력협정」에 의거, 국방부 문일섭 국방차관과 러시아 산업과학기술부 라포타 제1차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제1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원회」 회의가 2000년 11월 23일 한국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군사기술 방산협력 업무 절차와 획득업무 제도를 확인하였고, 러시아 대표단은 방산업체를 방문하였다.

2001년 푸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심화하였다. 러시아의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였고, 한·러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7) “한-러,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 합의,” www3.yonhapnews.co.kr, 2000. 6. 29.

방러 결과에 관해 집중 협의하였고, 러시아는 군사무기 판매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러 양국의 이해일치로 푸틴 대통령이 엘친 전 대통령의 1992년 11월 방한이후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는 두번째로, 8년만에 방한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2001년 2월 27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7개 항으로 된 「한·러 공동성명」¹¹⁸⁾을 발표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다자대화의 실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는 데 동의하는 한편, ABM 조약의 보존·강화, START II의 조기발효와 완전한 이행, START III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하였다.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란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미국이 추진 중인 NMD 체제를 비판 또는 반대하고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상회담의 의의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심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테러와 대량파괴 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양자간 및 남북한·러시아 3각 경협의 증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16일 「디펜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이 한국 군수무기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 및 러시아 무기제조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군수무기 시장을 파고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전투용 헬기 사업규모는 18억 달러 상당(40대)인데 러시아가 카모프(Ka)-52 헬기에 대한 판매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8) “김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청와대 보도자료, 2001. 2. 27).

한·러 양국은 2001년 9월 25~27일 모스크바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후속조치 및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10월 20~21일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양국 정상은 한반도문제와 경제협력 방안 등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청취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러시아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러 양국은 10월 8일 서울에서 제6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국제 및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북·러간 무기거래 문제가 ① 한반도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고, ② 한·러 우호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③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¹¹⁹⁾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11월 19일 고려대 특강에서 “한반도 통일의 대외상황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러·중·일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며 그 이후에 더 폭넓은 문제를 다루는 동북아 대화채널을 만들어야 한다”¹²⁰⁾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나) 대북한 정책

러시아의 대북 관계는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 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남북정상

119) “한·러, 국방정책 실무회의 개최,” www3.yonhapnews.co.kr, 2001. 10. 5.

120) Mikhail Gorbachev, “International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The Seventeenth Incheon Memorial Lecture, Korea University, November 19, 2001, p. 18.

회담 직전 김정일의 방중, 남북정상회담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등을 통해 중·러·북한 3각 안보협력이 긴밀히 되었다.

가조인 상태에 있던 신조약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의 공식 조인을 위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0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10년만인 2000년 2월 9~10일 평양을 방문 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쌍무관계 강화와 정치적 대화 수준 제고에 대한 신조약의 기여 가능성, 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한민족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 개선과 동북아 평화·안전의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주변국들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에 대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였다.¹²¹⁾ 당시 김정 일이 공식 석상에서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 계획 은 없었다.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상 간에 2월 9일 공식 조인된 신조약은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신조약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 정불간섭, 동등권 및 국제법 원칙을 기초로 우호관계 발전(제1조), 쌍방중 일방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 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의 즉각 접촉(제2조), 상호 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 협의(제3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한 반도 통일 지지(제4조), 통상,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 한 적극 노력(제5조),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간 관 계 심화(제6조), 양국 도시, 기업, 단체 및 양측 인사간 접촉 등 다양

121) "Ivanov Gives Putin Message to North Korean Leader," FBIS-SOV -2000-0209, p. 1.

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 활성화(제7조),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12개월 내에 조약의 연장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제12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²²⁾

신조약에서는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러·북 양국은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양국이 「한·러 기본관계조약」 제2조 규정보다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측이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에 입각하여 북한을 러시아의 핵우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신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비확산 국제협상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²³⁾

러시아측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 고위관리와 양국 인사들의 교환방문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협력 증진, 미·일의 TMD 체제에 대한 공동 대처, 한반도 정세, 북한 무기체제와 구소련 시대 건설된 공장들의 노후화에 따른 협력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양국은 조약의 체결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바노프는 출국직전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러·북간에 직면했던 냉각기가 극복되었다”¹²⁴⁾고 밝혔다. 북한은

122) “북-러 신조약 전문,” www3.yonhapnews.co.kr. 2000. 11. 3. 신조약을 북한은 2000년 4월 6일,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7월 19일, 연방상원인 연방의회는 7월 27일 각각 비준하였고, 10월 30일 발효되었다.

123) *Izvestiya*, 2000. 2. 17.

124) “Ivanov Says ‘Chill’ in Russian-DPRK Relations Overcome,” FBIS-EAS-2000-0210, p. 1.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2월 16일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바노프의 방북을 계기로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⁵⁾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어 회담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했으며 이 회담을 획기적인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지하며 크게 만족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G8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7월 19~20일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의 방북 목적은 미·일의 TMD 계획과 남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견제,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향후 자신의 방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관계 유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경제실익 확보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전통적인 선린관계 유지,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 없는 상호 접촉,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지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등 11개 항의 『조·러 공동선언』¹²⁶⁾을 7월 19일 채택하였다.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중·북간 군사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러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중·러·북한 간에 3각 안보협력이 긴밀히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월 19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다른 나라들이 평화적인 우주탐사를 위한 로켓 발사체를 제공할 경우 단지 타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을 김정일이 푸틴에게 말했다”¹²⁷⁾고 보도함으로써 한·미·일 등 관계국은 이 보도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다. 이 문제는 미국이 요구해 온 북한

125) *Izvestiya*, 2002. 2. 17.

126) 통일부, 『북한동향』, 제496호 (2000. 7. 15~7. 21), pp. 45~48.

127) “Putin Views Supplying Booster Rockets For Space Research,” FBIS-SOV-2000-0719, p. 1.

의 미사일 개발중단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등의 세부적 사항에 진전이 있는 경우에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태지역 방위관계자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이었던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10월 18일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북한 두 나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역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¹²⁸⁾이라고 말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균형된 남북한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2001년 러시아는 북한과 2000년 체결된 신조약과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채택된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를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었다. 양국은 ABM 조약 유지와 미국의 MD 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 공동의 입장을 취하였다.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을 계기로 북한이 한반도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소련 시대에 제한된 수준에서 제공받아온 위성 사진의 무상제공을 2001년 초에 러시아 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공위성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들어 북한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9일 러·북 신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양국은 모스크바와 평양 대사관 및 청진의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각각 기념식을 갖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기념논설을 통해 미국의 MD 체제 구축 반대 등 북한과 러시아가 대미 견제에 있어 같은 입장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러 친선관계 발전은 새 세기의

128) “Russia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DPRK,” FBIS-SOV-2000-1018, p. 1.

시대적 흐름과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¹²⁹⁾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NMD 체제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2000년 창립한 『세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GCS) 2차 회의가 2월 15~1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남북한 등 71개 국과 유엔 등의 대표 약 120명이 참석하였다.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북한이 참가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3일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하면서 서도, 러시아 우주항공위원회와 핵에너지부 등을 거명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엄격한 수출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¹³⁰⁾

클레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방한시 2월 28일 『이타르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존의 협상과 한반도내 정치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것, 러·북간 군사기술 협력이 북한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구소련 무기에 대한 수리와 복원에 관련된 것이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밝혔다. 마메도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에게 푸틴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3월 1일 회동에서 박의춘은 북한이 ABM 조약 유지와 강화, 전략공격무기 감축 등에 관한 모스크바의 새로운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 초 미국의 민간 군사분석 기업인 『스트래트포 닷컴』(stratfor.com)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NMD 체제를 구축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북한과의 미사일 개발기술 협력을 동결하고 있고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발사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¹³¹⁾

129) 『로동신문』, 2001. 2. 9.

130) “푸틴,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미 비난 반박,” www3.yonhapnews.co.kr, 2001. 2. 23.

4월 27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시 러·북 양국은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협력 협정」과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북한의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 문제가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6월 18일 크렘린궁에서 미국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기술 수준 문제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제노바에서 개최되는 G 8 정상회담을 앞두고 7월 16일 이태리 한 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MD 체제 구축의 근거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북한은 7월 19일 「조·러 공동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등에 일제히 기념논설을 게재하였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ABM 조약 유지와 MD 체제 구축 반대 입장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우주의 군사화를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초청에 의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 차원에서 2001년 7월 26일~8월 18일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그의 방문 목적은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대남정책에 대한 속도와 폭의 조율 문제 협의,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와 부품의 장기적 확보, 교역 확대·구소련 시대 건설된 공장들의 재가동·철도의 현대화·원유의 장기적 확보 등 경험 문제 논의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부시 미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북한 3각 연합전선의 형성, 북한 카드를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의 지렛대로 사용, 중단된 남북대화의 중개자로 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TSR-TKR 연결 등 남북한·러시아 3각경협을 통한 경제실익 확보, 대북 군사무기 판매를 통한

131) “북한 미사일 개발 중·러 협력 동결로 담보,” www3.yonhapnews.co.kr, 2001. 3. 6.

경제이익 증대 및 한국에 대한 북한 카드의 활용 등에 정상회담의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월 4일 정상회담 직후 8개 항으로 구성된 「모스크바 공동선언」¹³²⁾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국의 MD 계획 반대와 ABM 조약의 유지 불가피성 등 국제안보 문제(제1~2항), 제반 분야 협력 확대와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기업소들의 지원 및 철도연결 등 북·러 관계(제3~6항), 남북대화 지속 지지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 표명 등 한반도문제(제7~8항)에 관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 중단된 군사위성 및 정찰 사진의 정기적 제공과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방공시스템 및 신형 T-90 전차 구입, 미그-27 전투기 조립생산 등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은 러·북 양국관계가 정치, 안보·군사, 경제 등 제분야에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동안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무기 부품만을 공급하였으나 군사장비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10월 19일 「평양방송」은 러·북 수교 53주년을 즈음한 「러시아의 소리」 논평원 글을 인용하여 양국 사이에는 최근 2년 동안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상호 협조관계가 가속화되는 등 양국 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11월 13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보도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철도연결 문제 등 러·북 양국간 실무협의를 이용해 “북한이 반테러 진영에 가담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북한을 설득해 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이야기

132) 『로동신문』, 2001. 8. 5.

를 듣기는 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¹³³⁾ 정상회담시 채택된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명시된 군사분야의 쌍무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군사대표단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33) “러, 북한에 반테러 협조 설득,” www3.yonhapnews.co.kr, 2001. 11. 29.

V. 푸틴의 군사정책 전망: 지속성과 변화

1.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의 지속과 변화면

상기와 같이 제Ⅱ장에서는 옐친 대통령 집권초기의 안보·군사전략과 정책, 제Ⅲ장에서는 옐친 대통령의 1993년 군사독트린과 정책, 제Ⅳ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2000년 신군사독트린과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장에서는 러시아가 출범한 1991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의 지속면과 변화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지속면

러시아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에서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론상 군사독트린의 방어적 성격, 핵무기 감축과 핵 억지력 유지, 병력 감축, 무기판매의 확대 노력,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 유지, 대중 안보 협력 강화, 북방영토와 대일 평화조약 문제의 미해결,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정책 등이다.

첫째, 러시아 군사독트린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옐친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유지하였는데 이 개념은 방어에 충분한 정도까지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하였다. 옐친 대통령의 1993년 군사독트린은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때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군 및 기타 부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러시아가 방어적 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있

음을 시사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2000년 신군사독트린은 서론에서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전략핵무기의 감축과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핵억지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에서는 최소 수준의 전략균형에 의해 보장되는 공동안보와 상호신뢰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1993년의 군사독트린은 대규모 전쟁 방지 및 전략적 안정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핵전력 축소를 지지하였고, 핵무기 부문에서의 목적을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침략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2000년의 군사독트린은 미국과 양자간 협상 및 다자간 협상에 의한 핵무기의 장기적 축소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역지를 위한 핵 보유국의 위상 보존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병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개혁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약 272만 명이었던 병력이 1999년 100만 4,100명, 2001년 97만 7,100명으로 축소되었고(<표-1> 참조) 2003년까지 36만 5,000명이 더 감축될 예정이다.

넷째,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발발 이전까지 구소련은 세계 제일의 무기수출국이었다, 1989년 148억 8,7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총 무기수출액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미국의 신무기에 대한 수요급증과 소련의 정치·경제적 혼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등으로 1990년 33%(96억 6,300만 달러), 1991년 18%(39억 3,000만 달러)로 각각 축소되었다.¹³⁴⁾ 이에 따라서

134) SIPRI Yearbook 1992: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272.

엘친 대통령은 1992년 1월 17일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의 외화 획득과 군수분야 지원을 위하여 무기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소련이 타국과 체결한 무기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추가 무기판매 방침을 밝혔다. 또한 바자노프 러시아연방 군수산업 민수전환위원회 의장도 같은 해 5월 러시아가 1992년도에 100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¹³⁵⁾

1993년 군사독트린에 의하면 ‘러시아연방의 대외 군사기술적 협력’의 목적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국의 군사정책적 입지를 강화하고 재래식 병기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의 국가 수출역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2000년 신군사독트린도 ‘재래식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의 국가 수출능력에 대한 지원’을 러시아연방의 국제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의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서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에 34억 달러에 달했던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이 1998년에 22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1999년 31억 달러, 2000년 34억 달러로서 1993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다섯째,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국제 안보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도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국제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엔안보리보다는 NATO에 의존하는 정책, 국가주권보다는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미국 주도에 의한 세계질서의 단극화보다는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 7월 중국과 체결한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이 조약이 제3국을 겨냥

135) Peter Almquist and Edwin Bacon, “Arms Exports in a Post-Soviet Market,”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6 (July/August 1992), p. 12.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등 미국과 비대결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MD 계획을 반대하면서 ABM 조약의 수정이나 탈퇴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막상 미국이 2001년 12월 ABM 조약 탈퇴를 발표하자 그 결정이 '실수'이며 "미국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극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이러한 대미 정책은 소련 붕괴이후 자국의 영향력 축소로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자국의 경제난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는 다수의 미사일과 잠수함 및 핵탄두의 해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러시아의 대중 안보·군사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중·소 분쟁이 종식된 이후 긴밀해지기 시작한 중·러 양국의 안보·군사협력은 1996년 4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가능하게 했으며, 양국은 2000년 7월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국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 및 동북아 역내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견제 필요성, 러시아의 체첸 지역과 중국의 신장 지역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러시아의 무기판매 확대정책과 중국의 군현대화 정책 등의 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러·일간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는 냉전이 종식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 모두 평화조약 체결시 하보마이 섬과 시코탄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 시대에 러시아 정부는 5단계 해결방안(북방영토 문제 인정 → 북방영토의 비군사화 →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인 전

환 → 평화조약 체결 →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을 제시했으나, 일본은 '2단계 공식' (북방 4도에 대한 러시아의 일본주권 인정과 평화조약 체결시 시코탄·하보마이 2개 섬 양도 및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 섬 이양일자 명시 →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 섬 양도)을 제시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 시대에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의 동시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 두 가지 문제의 분리와 경제·정치 협력의 확정을 희망하고 있다.

일곱째, 러시아가 한반도정책에서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대내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을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은 러시아 국익에 상응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한반도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김정일을 후계자로 즉각 인정하였고 1996년 9월 북한 잠수정의 강릉 침투와 1999년 6월 연평해전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국지적 무력충돌시 양측에게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도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였고 7월 방북 시와 2001년 2월 방한 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국경지역 부근에서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기에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불안 را 야기하였을 때 엘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행사 및 서방과 공조로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방한 시 「한·러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변화면

한편, 러시아의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핵무기 사용, 대미 관계, 대일 군사협력, 북한 미사일과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첫째, 옐친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핵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핵비보유국에는 핵공격을 삼간다는 구소련의 군사독트린이 적용되었다. 1993년 군사독트린도 핵비보유 NPT 가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2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① 핵무기 보유국과 동맹조약을 맺은 국가가 러시아나 동맹국을 무력침략하는 경우, ② 핵무기 보유국과 함께 러시아나 동맹국에 공동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즉 ①과 ②의 경우는 핵비보유 NPT 가맹국이라 할지라도 러시아의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군사독트린이었다. 2000년 군사독트린은 1993년 군사독트린을 기본으로 하되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하여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대규모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권을 유보한다”고 선제 핵공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옐친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친서방외교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잠재 적국을 실질적으로 상징하지 않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주요한 정치적, 이념적 동맹국으로 간주하였다. 1993년 독트린에서는 “러시아는 어떠한 국가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NATO는 이미 1991년 채택된 ‘신전략 개념’을 바탕으로 「북대서양협력회의」(NACC) 형태로 동구 및 CIS 국가들과의 외교적, 군사적 접촉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보스니아 내전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슬라브족인 세르비아계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는 NATO 및 서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전이 있으나 이들의 기본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화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러시아는 1993년 독트린에서 잠재 적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질 정책면에서는 집적된 미국과 NATO의 군사력 및 동구 확대정책을 우려하였다. 한편 2000년 신군사독트린은 1993년 독트린에서와 같이 잠재 적국이 없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잠재 적국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기 때문이다. 신군사독트린은 “세계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고 하나의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데 바탕을 둔 세계의 단극화가 공고해지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 공통의 원칙과 국제법 규정을 불이행하는 군사-무력 책동”을 군사-정치적 상황의 주요한 불안정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등 간접적으로 잠재 적국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서 변화를 겪고 있다.

셋째, 옐친 대통령 시대와 비교할 때 푸틴 대통령 시대의 대일 안보·군사 협력은 현저히 확대되었다. 옐친 대통령 집권 시에는 러시아 정세 불안정, 경제난,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안보·군사 면에서 일·러 간 협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집권이후 정국 안정과 경제회복 추세, 북방영토 문제를 조기에 타결짓기 위한 일본의 대러 유화정책,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 처리를 위한 원자로 건설에 대한 일본의 협력, 구소련 시대를 포함해 사상 최초의 러시아 해군참모총장 방일 등으로 러시아의 대일 안보·군사 협력은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또한 양국간 경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옐친 대통령 시대와 푸틴 대통령 시대에 명확히 구분이 된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I」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을 때, 러시아 정부는 그 발사체가 러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웃 국가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19일 방북시 채택한 「조·러 공동선언」에서 “조선은 자기의 미사일 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띠는 것을 확인한다”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8월 4일 방러시 채택된 「모스크바 공동선언」도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MD 체제를 구축하려는 부시 미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ABM 조약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소련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군사무기 제공 국가이었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 시대에는 러시아 정부의 경화결제 요구와 북한의 외화 부족 때문에 군사무기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소련 시대에 제공된 무기들의 정비를 위한 부품만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푸틴 대통령 시대에 다시 변화되었다. 러시아의 무기판매 확대 정책과 북한의 군전력 강화 정책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북한이 다시 러시아의 최신 군사무기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방러를 통해 2001년 4월 27일 북·러 양국간에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협정」과 「2001년 군사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러시 움스크 소재 T-80 탱크 공장과 최신 전폭기 SU-34를 생산하는 츠칼로프 항공생산연합체를 시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북 군사무기 판매 가능성은 매우 높다.

2. 푸틴의 군사정책 전망

러시아 안보·군사 전략과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상기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대내외 군사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될 수 있다.

가. 대내 군사정책

푸틴 대통령은 이론상 방어적인 군사독트린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세적인 2000년 신군사독트린을 2005년경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무기를 계속 감축하되 핵억지력 및 러시아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시 선제 핵공격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자 할 것이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개혁 정책에 따라서 2005년경에는 러시아군 병력이 60~70만 명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군은 새로운 낮은 수준에서도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이미 다수의 채워지지 않은 직책들이 있고 징병은 소집령 정원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 개혁의 다음 단계는 ‘상비부대’ 수를 증가시키고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와 성능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2005년까지 군 구성에 관한 국가프로그램’에 의하면 지상군은 1개 해병사단, 7개 육군사단, 2개 공군사단으로 구성되는 ‘상비부대’를 10개까지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직업군 창설을 위해 1996년 대통령령에 의해 세워진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반면 1998년 12월 옐친 대통령은 군이 무력분쟁 상황에서 단지 직업 하사관과 사병들만을 이용할 의무가 더 이상 없고 징집할 수 있다는 포고령에 서명하였다. 이 포고령은 직업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조건들, 특히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면 이행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직업군으로의 이행은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는 국내 군수산업을 민수분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합작사업을 환영하고 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러시아 군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때문이다. 이는 또한 러시아 군사비가 국제원유가 추세에 불모로 잡혀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원유가 하락시 러시아 군사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200여년 이상 독립항쟁을 해온 체첸인들의 남부 산악지대에서의 지속적인 게릴라전으로 체첸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체첸 사태의 장기화는 푸틴 대통령에 적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대외 군사정책

(1) 세계 및 동북아 군사정책

푸틴 대통령은 국제 안보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및 미국과 평등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인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등 범세계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대아프가니스탄 보복작전을 계기로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에 군사 및 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의 발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이란 및 타지키스탄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군사무기에 대한 이란의 총 구매력이 40~50억 달러로서 이는 러시아의 연간 무기수출 총액과 비슷한 액수이다.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수출 확대는 이란을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2001년 12월 13일 ABM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2002년 6월 이 조약은 폐기될 예정이다. 미사일 추적 실험과 알래스카 통신센터 건설 등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러 경제지원 등이 러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러시아는 미국의 MD 체제 계획에 다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 군사, 경제의 제반 사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련 붕괴이후 약화된 러시아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무기와 기술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의 방지,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 유지, 일본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창설 등의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러시아는 미국의 MD 계획과 대테러 전쟁 등 국제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양자간 정상회담 직전 사전협의하고 회담 직후 그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공동으로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 러·중 양국은 이를 능가하는 신무기를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이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을 통해 2001년부터 「상하이 협력기구」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중·러 양

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테러와 마약, 무기밀수를 방지하고 이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더욱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제 침탄 구축함 2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 이상을 2년 내에 구매하고 최신예 전투기 SU-30 38대를 2003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공군력은 대폭 증강될 것이다.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일 정책과 관련,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시 하보마이 섬과 시코탄 섬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두 개 섬 역시 자국의 영토라는 입장이고 국민여론도 반환에 반대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북방 4개 섬 문제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 집권이 후 국내정국 안정과 경제회복 추세, 원유와 천연가스 등 러시아 자원에 대한 일본의 이해 등으로 러·일 양국간 안보·군사 협력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2) 한반도 군사정책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정책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인 안보·군사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 등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의 개최를 촉구할 것이다.

한·러 양국간에는 현재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없기 때문에 향후 안

보·군사 면에서 고위인사 교류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ABM 조약이 폐기되고 탈레반에 대한 국제적 보복전쟁이 종료되면 미국은 MD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인데, 이 때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미국의 MD 계획에 대한 비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가 현재와 같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다. 또한 군사무기 판매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Ka-52 헬기, S-300 지대공 미사일, SU-35 전투기 등의 구매를 한국측에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무기 판매대금을 약 18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 미상환분의 일부로 상계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향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직접적인 대북 압력이나 서방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이 과거 핵 규명을 위해 북한에게 강제사찰을 하거나 군사제재를 가하는 데는 반대할 것이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 특히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미국의 MD 계획을 일정한 수준에서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MD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의 대미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러시아는 2003년까지 동결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2003년 이후에는 묵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북 양국은 2001년 8월 개최된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안보·군사관련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시 그를 수행했던 풀리코프 스키 러시아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리인의 방북이 2002년 4월 25일 북한군 창군 70주년 기념일 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러·북 협력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2001년 4월 체결된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협정』에 따라서 양국은 군장비 수리와 현대화 부문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대북 무기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 군사균형을 고려하여 첨단 군사무기와 장비를 대량으로 북한에 판매 하지는 않을 것이다.

VI. 정책적 고려사항

상기와 같이 푸틴 대통령이 세계와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군사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망할 때,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러 및 대북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ABM 조약 탈퇴 결정으로 미국과 러·중이 미국의 MD 체제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MD 계획 문제가 협상과 대화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정부와 언론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으며 한·미간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데 있다. 2001년 8월 4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채택된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understanding)는 찬성을 뜻하는 외교 용어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1년 3월 초 미국의 민간 군사분석 기업인 「스트래트포 닷컴」(stratfor.com)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NMD 체제를 구축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북한과의 미사일 개발기술 협력을 동결하고 있고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발사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그와 같은 대북정책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푸틴 대통령은 2001년 2월 23일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하면서도, 러시아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엄격한 수출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자나 부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러시아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책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관계 진전을 희망하는 러시아 정부는 담보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의 중개자 역할도 할 의도가 있는 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미·북대화 재개에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해 남북한과 미·러 4국의 관료와 학자들이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협상 경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러시아는 군사무기와 장비 판매의 확대를 위해 남북한 이 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의 무기체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18억 달러 경협차관 미상환액의 상계차원에서 러시아 방산물자를 적정 수준 구매할 필요가 있다.

<부록> 소련군과 러시아군의 군비 비교

소련군(1991년)	러시아군		
	1992년	1999년	2001년
○ 전략핵군 - 전략로켓군: 대륙간미사일 1388기 장갑차 1,700대 헬기 140대 - 전략항공: 폭격기 587대 정찰기 105대 급유기 69대 공대지미사일 - 해군: 잠수함 60척 미사일 912기 ○ 지상군 전차 54,400대 경전차 1,000대 정찰차 8,000대 장갑전투차 28,000대 장갑차 50,000대 대포/박격포 64,200문 지대지미사일 1,350 발사대 대전차포 8,000문 방공포 12,000문 지대공미사일 4,960기 헬기 4,500대	○ 전략억지군 - 전략로켓군: 대륙간미사일 1,400기 장갑차 1,700대 헬기 140대 - 전략항공: 폭격기 581대 정찰기 83대 급유기 75대 - 전략방위: 공대지미사일 100기 경보위성 9개 경보레이더 22개 - 해군: 미사일 832기 ○ 일반목적군 - 지상군: 전차 29,000대 경전차 800대 정찰차 6,000대 장갑전투차 28,000 장갑차 2,3,000대 대포/박격포 47,700문 지대지미사일 900 발사대 지대공미사일 헬기 3,200대	○ 전략억지군 - 전략미사일방어대: 대륙간미사일 771기 탄도탄요격미사일 100기 - 해군: 미사일 332기 - 레이더경보체제 21개 ○ 육군 전차 15,500대 경전차 200대 정찰차 2,000대 대포/박격포: 15,700문 지대지미사일 316발사대 지대공미사일 2,300기 헬기 2,300대 ○ 공군: 전투기 1,800대 - 장거리항공사령부 폭격기 급유기 20대 훈련기 40대	○ 전략억지군 - 전략미사일군: 대륙간미사일 740기 탄도탄요격미사일 100기 - 해군: 미사일 280기 - 레이더 경보체제 21개 - 우주군: 2001. 6. 1 창설 ○ 육군 전차 21,820대 경전차 150대 정찰차 2,000대 장갑차 25,975대 대포: 20,746문 지대지미사일 200기 지대공미사일 2,300기 헬기 1,700대

소련군(1991년)	러시아군		
	1992년	1999년	2001년
○방공군	- 방공군:	- 전술항공	○공군:
탄도탄 요격미사일	전투기 2,200대	폭격기/지상공격전투기	- 장거리항공사령부
100기	훈련기 550대	575대	폭격기 206대
전투기 2,370대	조기경보기 15대	전투기 880대	급유기 20대
훈련기 600대	공대공미사일	정찰기 135대	훈련기 38대
예비기 100대		조기경보기 20대	- 전술항공
지대공미사일 8,650	- 공군:	전자대응기 60대	폭격기/지상공격전투기
발사대	지상공격전투기 1,800대	훈련기 90대	586대
경보위성 9개	전투기 1,500대	지대공미사일 2,150	전투기 952대
경보레이더 22개	정찰기 365대	발사대	정찰기 226대
	전자대응기 40기	- 군수송항공사령부	조기경보기 20대
○공군	훈련기 1,500	항공기 280대	전자대응기 60대
지상공격전투기	헬기 320대	중장거리 수송기	훈련기 155대
2,240대	공대공미사일	1,500대	공대공미사일
전투기 2,130대	공대지미사일	- 공군항공훈련학교	공대지미사일
정찰기 475대	군수송기 620대	전투기 3,966대	지대공미사일 1,900기
전자대응기 60대		헬기 805대	- 군수송항공사령부
훈련기 2,000기			항공기 354대
헬기 220대			중장거리 수송기
공대공사일			1,500대
공대지미사일			- 공군항공훈련학교
			훈련기 980대
			- 작전전투기 2,636대

소련군(1991년)	러시아군		
	1992년	1999년	2001년
○해군: 잠수함 317척 전투함 218척 - 항공모함 5척 - 순양함 38척 - 구축함 29척 - 소형구축함 146척 순시 및 해안전투정 382척 어뢰정 292척 수륙양용정 78척 지원 및 기타 합정 732척 해군항공 - 전투기 1,354대 - 무장헬기 312대 해병대 - 전차 240대 - 경전차 100대 - 정찰차 30대 - 장갑차 2,000대 - 포/박격포 795문 - 지대공미사일 295기	○해군: 잠수함 250척 전투함 192척 - 항공모함 4척 - 순양함 33척 - 구축함 26척 - 소형구축함 129척 순시 및 해안전투정 305척 수륙양용정 80 지원 및 기타 합정 685척 보조함 2,800척 해군항공 - 전투기 1,100대 - 무장헬기 290대 해병대 - 전차 240대 - 경전차 100대 - 정찰차 60대 - 장갑차 2,000대 - 포/박격포 - 지대공미사일 295기	○해군: 잠수함 70척 전투함 35척 - 항공모함 1척 - 순양함 7척 - 구축함 17척 - 소형구축함 10척 순시 및 해안 전투정 112척 어뢰정 72척 수륙양용정 25척 지원 및 기타 합정 436척 보조함 1,448척 해군항공 - 전투기 329대 - 무장헬기 387대 해병대 - 전차 130대 - 정찰차 60대 - 장갑차 1,500대 - 포/박격포 553문 - 지대공미사일 320기	○해군: 잠수함 56척 전투함 35척 - 항공모함 1척 - 순양함 7척 - 구축함 17척 - 소형구축함 10척 순시 및 해안전투정 108척 어뢰정 71척 수륙양용정 25척 지원 및 기타 합정 436척 보조함 1,503척 해군항공 - 전투기 217대 - 무장헬기 80대 해병대 - 전차 160대 - 정찰차 60대 - 장갑차 1,150대 - 포 321문 - 지대공미사일 250기

소련군(1991년)	러시아군		
	1992년	1999년	2001년
해안포대 및 로켓군 - 지대지미사일 40기 해안방위대 - 전차 810 - 장갑전투차 640 - 장갑차 160 - 포 1,346문 - 다연장로켓 발사대 54	해안포대 및 로켓군 - 대포 - 지대지미사일 40기 해안방위대 - 전차 1,080대 - 장갑전투차 960대 - 장갑차 480대 - 포 992문	해안방위대 - 전차 350대 - 장갑전투차 450대 - 장갑차 680대 - 포 354문	해안방위대 - 전차 350대 - 장갑전투차 450대 - 장갑차 680대 - 포 364문

출처: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36~45; *1992~1993* (1992), pp. 92~101; *1999~2000* (1999), pp. 112~118; *2001~2002* (2001), pp. 112~118.

참고문헌

1. 단행본

- 러시아연방공화국 국방부. 『러시아의 신군사전략구상』.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
- 세종연구소. 『러시아연방 국가안보 신개념(전문)』, 통권 제2호. 2000. 2.
- 외무부. 『러시아연방 개황』. 1995. 9.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Hudson, George E. e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 SIPRI, *SIPRI Yearbook 1993~99: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각년도.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4th quarter 1999*. London: EIU, 1999.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92-1993*. London: IISS, 1993.
-
- _____ *Strategic Survey 1996/97*. London: IISS, 1997.
-
- _____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London: IISS, 1992.
-
- _____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London: IISS, 1999.

Military Balance 2000·2001. London: IISS, 2000.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IISS, 2001.

The

2. 논문

뜨까첸꼬, V. P.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러시아 대통령 의회 연두교서 연설.” 『중소연구』, 20권 4호 (1996/7 겨울).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중소연구』, 통권 84호(1999/2000).

“러시아 聯邦軍 창설에 관한 러시아 大統領令.” 『현대 러시아연구』 (1992. 7).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 『중소연구』, 18권 1호 (1994 봄).

마스니꼬프, V. S. 「러시아와 중국: 아태지역에서 동반자관계의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브로니스라브 오멜리체프,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인터콘티넨탈 호텔, 1992. 6. 1.

“「新生러시아軍」構築의 目的.” 『국제문제』, 제24권 제6호, 통권 274호 (1993. 6).

심경옥.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내용과 의미.” 『국방논집』, 제26호

(1994년 여름).

엘친, 보리스. “군비제한과 삭감에 관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하여.” 『중소연구』, 통권 53호 (1992 봄).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중소연구』, 20권 2호 (1996 여름).

한국국방연구원, 『북러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러시아연방 군사과학원 주최 제3차 한러 국방학술회의, 한국국방연구원 관영당, 2001. 10. 16~17.

Afanasiev, Evgeniy V. “New Leadership in Russia and Russian Internal and Foreign Policy, Asia-Pacific and Korean Peninsula Dimensions.”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0. 5. 24.

Arbatov, Alexei. “Empire or great power?” *New Times*, 1. 93.

Crow, Suzanne.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May 1994).

Gerald, Mary C. Fitz. “Documentation: Chief of Russia’s General Staff Academy Speaks Out on Moscow’s New Military Doctrine.” *Orbis*, Vol. 37, No. 2 (Spring 1993).

_____ “Gorbachev’s Concept of Reasonable Su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George E. Hudson e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Gorbachev, Mikhail. “International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The Seventeenth

Inchon Memorial Lecture, Korea University,
November 19, 2001.

Kounadze, Gueorgui F.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Kozyrev, Andrei. “Russia: A Chance for Survival.”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Ovsiyannikov, Vladimir. “USSR-Japan.” *New Times*, no. 6.
February 6~12, 1990.

Wettig, Gerhard. “Moscow’s Perception of NATO’s Role.”
Aussenpolitik, Vol 45, No. 2 (1994).

Zhebin, Alexander Z.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3. 기타

통일부. 『북한동향』.

『동아일보』.

『로동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러시아방송」.

Defence News.

Izvestiya.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The Washingtonpost.

wnc.fedworld.gov.

www.russiatoday.com.

www3.yonhapnews.co.kr.

news.bbc.co.uk.

“김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청와대 보도자료,
2001. 2. 27.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209.207.236.112/nuke/
guide/russia/doctrine/991009-draft-doctrine. htm.

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field(DOCID+ru0182).

lcweb2.loc.gov/cgi-bin/query/r?frd/csydy:@field(DOCID+ru0194).

“New Russian Military Doctrine.” www.alenafix.com/old-fbg/
articles/russdoctrine.html.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
K_Report_6.txt.

Sokov, Nikolai, “Overview: An Assessment of the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www.nyu.edu/globalbeat/
nuclear/CNS1099.html.

“The DPRK’s Alleged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Facility.”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

DPRK/ DPRK_Report_13.txt.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mid.ru/mid/eng/econcept.htm.

“The NATO Issue.” l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
@field (DOCID +ru0189).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
DPRK/DPRK_Report_12.txt.

“Chi Haotian, Sergeyev Hold Talks, Sign Memorandum.”
FBIS-CHI-2000-0118.

“Clinton, Yeltsin Sign Strategic Agreement.” FBIS-SOV
-94-191.

“Duma START II Ratification Tied to NMD.” FBIS-SOV
-2000-0417.

“Foreign Ministry Document Outlines Foreign Policy.” FBIS-
SOV-92-232.

“Full Text of Sino-Russian 18 July Declaration,” FBIS-
CHI-2000 -0718.

“ITAR-TASS: Russian-Chinese Statement.” FBIS-SOV-1999
-1210.

“Ivanov Gives Putin Message to North Korean Leader.”
FBIS-SOV-2000-0209.

“Ivanov Says ‘Chill’ in Russian-DPRK Relations Overcome.”
FBIS- EAS-2000-0210.

“Kozyrev Gives News Conference on ROK Trip.” FBIS
-SOV-92-055.

- “Kozyrev Outlines Foreign Policy Priorities.” FBIS-SOV
-92-169.
- “Leaders Sign Joint Statement at Summit.” FBIS-CHI
-1999-0826.
- “Ministry Officials Reviews North Korean Ties.” FBIS-SOV
-91-247.
- “Moscow Denies Submitting Draft Treaty to Tokyo,”
FBIS-EAS-2000-0120.
- “Moscow Program Observes Changing World Order.” FBIS-
SOV-92-008.
- “Official: Russia set to further dialogue with Japan.”
FBIS-SOV- 2001-0731.
- “Optimism Expressed Over North-South Relations.” FBIS-
SOV-92-024.
- “Putin, Mori End Talks, Call For Closer Economic Ties.”
FBIS-SOV -2000-0429.
- “Putin Views Supplying Booster Rockets For Space
Research.” FBIS-SOV-2000-0719.
- “Russia, Japan Military Heads Discuss Security Issues.”
FBIS-SOV- 1999-0817.
- “Russia: Putin, Clinton Sign Strategic Stability Statement.”
FBIS-SOV-2000-0604.
- “Russia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DPRK.” FBIS
-SOV-2000-1018.
- “Russia: Yeltsin, Clinton Statement Summarized.” FBIS-
TAC-98-246.

“Russian Federation National Security Blueprint,”
FBIS-SOV-97-364.

“Security Council Views Foreign Policy Concept.” FBIS-
SOV-2000-0324.

“‘Shanghai Five’ Countries’ ‘Dushanbe Declaration’ Aims at
International Stability.” FBIS-CHI-2000-0706.

“Text’ of Joint Statement Issued by Jiang Zemin, Putin in
Moscow.” FBIS-CHI-2001-0716.

“Tokyo Editorial Raps Irkutsk Accord for Failing to Ensure
Return of 4 Islands.” FBIS-EAS-2001-0326.

“Xinhua Carries Press Communique of Shanghai Summit.”
FBIS-CHI -2001-0615.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
-0716.

“Yeltsin Delivers State of Republic Address.” FBIS-SOV
-91-250.